第262回國會 (定期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1 號
(豫算決算基金審査小委員會)
(임 시 회 의 록)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6年11月24日(金)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2007년도 예산안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다. 통일부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나.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審査된案件

1. 2007년도 예산안 ····· 1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다. 통일부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나.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16시22분 개의)

○小委員長 朴鍾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소위에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17대국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입니다.

제가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위원이 일곱 분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최소한 네 분 이상의 위원님이 계셔야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과 국제교류기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예산안에 관하여 전체위원회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또는 삭감 의견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듣고 정부 측의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한 후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가. 외교통상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다. 통일부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나. 통일부 소관(남북협력기금)

(16시24분)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국제교류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전체회의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또는 삭감 의견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제교류기금에 대해 감액 또는 조정해야 할 사항을 수석전문위원께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이규형 제2차관님과 산하단체장 등이 출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예산안심사 소위자료를 보면서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정부 측에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으로 된 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는 대체토론 요지이고 또 하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로 돼 있습니다. 이 두 자료를 같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소관 2007년도 예산은 세입이 1324억 8900만 원이고 세출은 1조 334억 450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정부 전체 총지출 238조 5000억 원의 0.43%이고 일반회계 총계 158조 원에 0.65%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자료 1쪽과 대체토론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수석전문위원님, 그동안에 우리가 국정감사도 했고 또 일반 상임위원회도 여러 번 했고 예산안 대체토론도 했고 또 국회에 기획예산처에서 의견 낸 것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런 게 전부 다 취합이 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일단은 저희가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심으로 자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국감 때 문제 제기됐던 것은 취합이 안 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대부분의 내용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면 첫 번째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국제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임종석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서 국제외교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증액의견을 내신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3억 6000만 원에 비해서 2억 4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이 감액된 사유는 일반사업비 전체 5~15% 감액을 하라고 하는 지침에 따라 가지고 감액된 것이고요. 일단 10명을 매년 대표로 파견하는 것을 유지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임종석 위원께서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증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예산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상황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위원님들 하나하나 토론하시겠습니까 죽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하시겠습니까?

○최성 위원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고흥길 위원 다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 보고……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2항.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두 번째는 중장기 외교전략 개발사업입니다.

새로운 외교통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외교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고 2002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6년도 2억 1800만 원에 비해서 3200만 원이 감소된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배기선 위원님께서 중장기 외교전략 및 인력개발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한화갑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거시적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할 중장기 외교전략 개발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러한 기본지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요. 가급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일, 대중 또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라고 하는 큰 측면에서 보면 다소 이 부분을 좀 증액을 시켜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해 주시고 여야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하면 부처 답을 듣는 게 낫지 하신 것마다 답변하면 똑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고흥길 위원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설명하시고요.

○최성 위원 일단 죽 설명을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주평화포럼 개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한반도 통일 및 동북아 평화 협력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 목적으로 제주평화포럼 경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4차 포럼이 개최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흥길 위원님께서 제주평화연구원에 대한 출자금 형태의 지원방식과 중복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최재천 위원님, 임종석 위원님, 한화갑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북한 핵 문제 대처 및 6자회담 참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6자회담을 비롯한 각종 북핵 문제 관련 회담에 참가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억 4200만 원에서 내년에는 2억 3600원으로, 6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북경에서 개최될 6자회담 참가비로 2억 원, 미국·중국·일본과의 양자 협의 비용으로 36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배기선 위원님께서 북한의 핵 문제 대처 및 6자회담 참가 예산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정의용 위원님, 최성 위원님, 최재천 위원님, 한화갑 위원님께서도 북핵 위기와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2쪽이랑은 다 넘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최성 위원 바로 3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제가 지금 대체토론 요지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개를 같이 봐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체토론 요지 자료의 3쪽이고, 연번을 중심으로 사업을 대비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권 공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사적 고증 및 국제법적 분석을 통해서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영토 문제의 사법적 해결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금년도 6억 68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가한 6억 6900만 원이 2007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박희태 위원님과 최성 위원님께서 백두산공정 및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의 국제기구분담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및 사업분담금의 납부를 통해서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금년

도에 1566억 6500만 원에서 73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300억 3500만 원이 2007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시에 체납금 일시 해소를 위한 증액 요구를 하시는 지적이 있었고 금번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이해봉 위원님과 고흥길 위원님께서 국제기구분담금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약화된 현 시점에서 2008년까지 분담금 체납을 일괄적으로 해소하려는 계획은 무리가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국제기구분담금은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탑다운 예산 적용 방식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반면 임종석 위원님께서는 PKO 분담금 체납액을 일시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요지 자료 4쪽의 7번, 대일 예방외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사,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다양한 갈등요인에 따른 한일 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국제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 67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감액된 1억 4900만 원이 2007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6자회담 등의 성공 추진에 일본의 협조가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향후 공공외교,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이나 과거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영달 위원님, 최성 위원님, 한화갑 위원님께서 그러한 내용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8번의 북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추진을 위해서 주미대사관이 홍보컨설팅 전문회사를 고용하는 예산과, 미 의회 보좌관 및 한반도 전문가를 초정하는 예산 그리고 한미동맹 미래 발전 방향 연구 등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이화영 위원께서 비자면제, FTA 관련한 의회 설득을 위해서 대미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찬가지 취지에서 이해봉 위원님과 진영 위원님께서도 대미외교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도 대체토론 요지 5쪽의 9번,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지역외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을—FEALAC이라고 합니다만—활용한 중남미 협력증진 도모를 하고 남미자원개발지원센터를 활용한 남미지역과의 자원개발 협력을 하는 두 가지 사업을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억 800만 원이 감소된 2억 7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종전에 한·중남미 협력기금 예산 중에 들어 있던 5개 중남미협력기금이 국제기구분담금으로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4억 7500만 원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는 33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영달 위원님께서 자원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증액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10번의 아중동국가와의 지역외교 사업입니다. 한·중동 포럼 및 한·아프리카 포럼을 통해서 아중동국가들과 우호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중동국가들과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1억 700만 원 그리고 한·아프리카 포럼에 1억 8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2억 8700만 원이 돼서, 금년에 비해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장영달 위원님과 최성 위원님, 한화갑 위원님께서 에너지자원외교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대중동, 대아프리카 외교 예산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11번, 재외영사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구난활동, 순회영사활동, 법률전문가 자문활동, 영사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이 11억 42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8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해봉 위원님께서 해외교민 보호를 위한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최성 위원께서도 해외교민 보호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요지 6쪽의 12번, 재외동포재

단 출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외동포재단 출연을 통해서……

○小委員長 朴鍾根 위원님들, 더우시면 저고리 벗고 편안한 자세로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번 재외동포재단 출연 사업은 재단에 대한 출연을 통해서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47억 1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8억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김덕룡 위원, 정의용 위원, 진영 위원, 김무성 위원, 장영달 위원님께서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이 교류재단기금에서 되는 것은 기금재원의 고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직접 출연금액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13번의 전자여권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49억 2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권심사관 50명 증원을 위해서 2억 2500만 원 또 조폐공사 제조 위탁에 45억 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리스료로 1억 77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이화영 위원님께서 빈번한 여권발급제도 변경으로 국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전자여권을 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시스템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약금 32억 1700만 원 등 예산 낭비 및 부정확한 예산 편성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삭감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아울러서 최재천 위원님께서는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하셨고 김용갑 위원님께서는 전자여권 예산의 증액을 통해서 여권행정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의 14번, 자유무역협정 체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형 통상국가의 실현 및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세안, 일본,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인도와의 FTA협상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MERCOSUR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중국, EU, 한·중·일이 참가하는 중장기 추진 대상국과의 FTA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1억 85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2억 25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미FTA기획단의 경우는 내년 3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에도 예비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성 위원님께서는 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 15번의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외국에 소유하고 있는 청사, 관저 그리고 직원 주택 등 총 192개 건물 중 우리 정부나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25년 이상 된 청사가 54.5%, 관저가 65.8%에 이르고 있고 또 우리 정부 예산의 유지보수비 책정이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김용갑 위원님께서 재외공관 개·보수 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서 공관자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위원님께서도 2007년도 예산안의 재외공관 확충계획의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의 16번, 재외동포 임시보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지역을 이탈해서 우리 재외공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식비, 항공료 등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종전에는 외교활동비에서 집행이 됐었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이 예산이 16억 3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관리 그리고 항공료 등 필요한 경비에는 모자라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 김무성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인권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쪽의 기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문화교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한국문화예술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장기적·정책적인 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해봉 위원님께서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반면 임종석 위원께서는 국제교류재단 문화교류사업과 민간예술단체를 통한 재외공관 문화외교 지원 사업의 중복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행하여진 대체토론의 요지를 보고드렸습니다.

○고흥길 위원 의사진행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친절하게 다 낭독을 해 주셨는데 대충 저희가 한번 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심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증액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의지가 실렸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또 일일이 그 양반들의 의견을 여기서 다 참작해 가지고 예산에 손대기 시작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여기서 증액을 시킨다고 해봐야 저쪽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증액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본인이 각자 '나는 이것을 꼭 좀 관철을 시키고 싶다' 하는 부분, '이것은 꼭 좀 삭감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각자 위원들께서 들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간 절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오케이, 한 항, 한 항 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시간이 한없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최성 위원 같은 의견으로 드리면 예결소위 위원님별로 돌아가시면서 이 전체를 보고 반드시 삭감할 해야 될 거라고, 그렇다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삭감해야 될 거, 반드시 좀 증액했으면 좋다는 거, 혹은 반드시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 들어 본 이후에 거기에서 하나하나씩을 끝내 놓고 나중에 총괄로 하면 시간이 많이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武星 委員 저는 외교부로부터 꼭 해야 될 것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어 보고 했으면 합니다.

○고흥길 위원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열여섯 가지, 뒤에 기금까지 열여덟 가지인데요. 순서대로 제가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사실 많으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수준으로 봤을 때 꼭 해야 할는지? 우리 국장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외교전략 개발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북핵, 평화체제 연구 문제라든지 대일·대미·대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외교전략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감액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평화 포럼 개최 지원은 저희들 50억 원 출연금하고는 전혀 별도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유수한 사람들 제주도에, 그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그것과 맞추어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번, 북한 핵문제 대처 및……

○小委員長 朴鍾根 매년 했던 사업이라고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격년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금년에 하고?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북한 핵문제 대처 및 6자회담 참가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받고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600만 원이 줄었던 까닭은 환차를 1000원에서 950원으로 나중에 계산했기 때문에 줄었던 것이고 또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6자회담 전망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우선과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대폭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유권 공고화 사업, 위원님들의 동북공정에 대한 지적 또 간도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국제기구분담금 이 파트는 제가 설명드릴 때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73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더해서 체납돼 있는 7000만 불 부분을 이번에 완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대일 예방외교 이 부분도 사실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같은 의미에서 북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이 부분도 한미동맹 관계라든지 FTA 또 비자면제프로그램 이런 면에서 저희가 별도로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4억의 홍보 지원을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양자 통상현황 관리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중남미지역국가와 아중동지역국가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수준에서 가도, 우선 금년도에는 한·아프리카 포럼을 했고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꾸려 나가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경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이 되는 방향이 좋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별도의 소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이 문제는 기금과 예산을 혼용해서 쓰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기획예산처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재정을 통합 운용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줄이고 기금을 늘이는 그런 입장을 해서 그나마 저희들이 4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일단 금년도 약 60억 증액분을 기금에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기획예산처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여권 개발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약 45만 권의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것을 예상해서 그거에 따른 4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 속도를 보면 내후년도 초반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부 감액을 해 주셔서 그 돈에서 감액된 부분을 다른 증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는 아까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일단 내년 3월까지 배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증대되면 그것은 별도 정부 전체 차원에서, 외교통상부 차원만이 아니라 전 부처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통외통위에서 특별히 고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시 부족한 부분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얻은 것이 이쪽 부분이고, 되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획예산처하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재외동포 임시보호지원 문제가 이 뒤에 있는, 이거 조금 내용이 복합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가 활동비에 23억이 예정이 돼 있고 내년에 19억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4억 정도의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배정돼 있는 예산 속에서가 아니라 별도로 국회에서 특별히 배정을 해 주시는, 그런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문화교류 부분에 국제교류기금 1번, 2번이 있습니다마는 문화교류 이 부분과 재외동포교류 지원 이 부분은 저희 이사장, 총재께서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방향은 그런 방향인데 과연 어느 정도 이것을 반영할 수 있을는지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간략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몽준 위원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여기 대일 예방외교라는 거 있잖아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정몽준 위원 예방외교라는 것이 외교 중에 특별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개념이에요? 이런 말을 외무부가 많이 씁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방외교……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친한 인사들을 가까이 하고 사전 설명을 하고……

○정몽준 위원 그 부분 그냥 외교에 다 포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해결……

○정몽준 위원 사전이든 사후든 할 수 있는 것이 외교일 텐데, 예방외교라는 말을 외무부에서 흔하게 씁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일외교 강화……

○정몽준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예방외교'라고 붙여서, 그러면 별도의 특별한 내용이 들어 있는 건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일반적인 인사교류나 어떤 외교 협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저희들이 외교라고 했고, 좌우간 저희가 여기서 '예방'이라고 붙였던 것은 사전정지 이런 의미에서 붙였는데 그렇게……

○정몽준 위원 그렇게 치면 예방외교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라면 이 항목이 다 있어야 될 걸. 저는 이런 단어 있는 것 자체도 정직한 행정 같지가 않고 그래서……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그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몽준 위원 일종의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몰라도 말 못할 사정이 없다면 이런 것은 참 안 좋은 관행이 되겠어요. 나중에 참고로 하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알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예방외교라는 말이 특별히 개념이 애매모호하니까 역사왜곡하는 위안부 문제에 중점적으로 쓰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최성 위원 한일외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들이잖아요? 실제로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한, 그렇지요?

○정몽준 위원 주요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요. 일반적인 외교항목에 다 넣어야지요. 별도로 하는 이유가……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맞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현안 문제에 대한 특별대책비라든가 이렇게 하지 남 안 쓰는 것은……

○정몽준 위원 별도 항목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편법이지. 외교에서 다 중요한 나라이고 그 정도 현안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성 위원 예방의 표현만 나중에 다른 식으로 해서……

○정몽준 위원 외교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외교부가 당연히 다 할 일인데……

○최성 위원 대일외교 강화 이렇게 해도 똑같지 않아요? 일본에 대한 외교를 강화한다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사실 외교현안을 해결하고 또 협의하고 하는 데 소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꼭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세부사업 번호 있지요? 여기 예산계획서에 독립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小委員長 朴鍾根 1431-402, 이름을 연구해 가지고 바꾸는 방향으로 하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최성 위원.

○최성 위원 저부터 할까요?

우선 견해부터 말씀드리면 예산 2항에 중장기 외교전략 개발, 배기선 위원님도 증액을 요청하셨고 그런데 증액의 필요성은 있지만 밑에 4항에 있는 북핵 문제 대처 및 6자회담 참가라는 현안 문제가 더 긴급하지 않느냐……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많은 외교정책이나 전략을 개발하는데 과연 저는 그것이 얼마나 외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지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다 증액할 수는 없으니까 배기선 위원님께서 4항도 요청하셨고 해서 북핵 문제 대처 및 6자회담 참가 쪽에 증액이 되는 것이 더 의미가 크지 않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 외교부에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제주평화포럼 개최 문제라든가 또 뒤에 보면 몇 가지, 대미외교 강화라든가 이런 것은 국제교류재단이나 또는 국제협력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도, 그러니까 잘못하면 외교부가 본예산에 넣고 협력재단에 넣고 또 교류재단에 넣고 이런 형태로 해서 다 증액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서 최대한 몸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은 교류재단이나 협력단 쪽으로 분산 배치를 하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평화포럼 개최지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를 여쭤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영유권 공고화 문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여야 막론하고 거의 모두 상임위에서 중요성을 강조했으니까 영유권 문제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의미 있게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북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8번 홍보컨설팅사로 해서 대미 외교활동 강화하고 이런 부분도 증액의 필요성은 동의하는데 그것을 꼭 외교부 본예산에서 하지 말고 다른 교류재단이라든가 협력단이라든지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질의는 13번에 전자여권 개발의 감액설명에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될 필요성은 없음, 조정사유 이것이 어떻게 조정되어 가지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추가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대체적으로 일차적인 제 의견은 이 정도 드리고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외교부나 전문위원께서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지금 말씀드릴까요?

○최성 위원 예.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위원님 지적하신 북한 핵 문제 대처 및 6자회담 참가 그 부분은 다른 데에서 올 수 있는, 지금 국제교류재단기금이나 또는 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의 단위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성 위원 3번 제주평화포럼 개최지원 같은 것은요? 국제교류재단 같은 데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기만 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주시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최성 위원 재단은 재원도 많고 하는데 뭐하러 본예산에 이것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외교부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아니,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재단이 21억이 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더 어렵고요. 적자 범위를 없애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일단 이 부분이 2억 원을 지원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2억 원을 확보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유권 공고화 부분은 저희들이 증대를 하는데 이것을 기금에서 다시 추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이 파트가 결국은 FTA나 VWP나 그 밖에 또 다른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대의회 홍보 강화라든지 유력인사, 여론지도층에 대한 대사관의 업무인데요. 그것을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최성 위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부가 본예산으로 본격적인 홍보컨설팅사를 이용해 가지고 외교활동을 할 경우는 자칫하면 큰 외교적인 무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민간외교를 강화하면서 준정부적 성격을 띠면서 지원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외교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컨설팅사가 어떤 객관성을, 어떤 컨설팅사를 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올리는 보고서가 객관성을 잃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정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저희가 홍보예산은 정식으로 미국에도 다 등록해서 고용해서 하는 것이고 기금에서 문화교류재단이나 이런 것은 한국학이나 특별히 제한된 목적의……

○최성 위원 저는 그것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교류재단이나 이런 것을, 정부는 정부예산이고 민간은 민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화영 위원 위원장님 죽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시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小委員長 朴鍾根 이렇게 합시다.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으니까 각자 의견을 한 번씩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기회를 넘기고……

○최성 위원 마지막으로 저 이야기만 들을게요. 전자여권 개발, 2007년도 예산에 계상될 필요성은 없음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자여권개발 발급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RFID칩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라든가 여권법의 개정 필요성이라든가 조폐공사

에 제조위탁을 하는 것이 맞는지 또 보안 및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등등이 있고 아울러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까지를 계산해 가지고 비자 거부율이 3%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서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등등의 문제점, 또 이화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사진전사식으로도 전자여권을 할 수 있는 등등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굳이 2007년도 예산에 이것을 다 계상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화영 위원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2쪽을 보시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결론을 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 여권업무 선진화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이 360억이었는데 내년도에 660억으로 증액됩니다, 전체적으로 여권선진화를 위해서. 여권발급을 위해서도 582억 원이 들어가고 여권사진전사식, 현재의 사진전사시스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30억이 또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전사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작년 5월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도입하면서 돈을 얼마 주었느냐 하면 82억 원을 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전사시스템을, 그 당시 도입할 때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 안 계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진전사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전자여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전에 사진부착시스템에서 도입을 동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여권 때문에 대란을 겪고 난 후에도 또다시 실험적으로 전자여권을 도입하기 위해서 중앙집중 방식으로 49억 원을 더 도입해 가지고 또 실험을 한번 더해 보겠다고 하는데 현재 죽 깔려 있는 여권발급시스템의 인프라도 다 무시되어야 되고 또 작년에 사진전사식을 도입하면서 리스해 왔던 기계를 반환하면서 위약금 32억을 또 물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사진전사 방식으로 충분히 전자여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하고 비자면제프로그램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는 근거를 대는데 지금 상황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 협의도 못 합니다. 거부율이, 이것 죽 읽어보시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충분히 근거가 되어 있고 문제는 이미 올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내년도에 증액을 했는데 거의 100% 이상 여권발급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예산 중에서 다른 외교활동비와 관련된 예산을 소소하게 수억씩 증액하고 나머지 전자식 여권, 중앙집중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시험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전액 삭감하면 충분히 예산에 돈을 다 맞추어서 외교활동비 쪽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고요.

중앙집중식 전자여권을 도입하려면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심의요청을 하면 우리가 현재 사진전사식 방식으로 전자여권이 가능한지 여부도 따져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제도 가지고도 충분히 전자여권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주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굳이 또 현재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꿔 가지고 중앙집중식, 여기에 있는 이런 흐름도에 따라 지자체에서 접수 받고 그것을 다시 외교부가 심의해서 다시 조폐공사에서 발권해 가지고 다시 지자체에 교부하고 이 시스템이 효율적인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실험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국민들이 혼돈 속에 빠져들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여권과 관련된 외교부 정책의 난맥상은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는 상태에 접어들기 때문에 굳이 또다시 실험적으로 중앙집중식 전자여권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다른 일반 외교비를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제가 한 2분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660억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여권발급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그동안에는 360억 플러스 대체경비해서 300억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을 대체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에 포함을 해서, 어차피 여권발급에 따르는 수수료에서 충당될 것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660억 되었다는 점을 민원해소라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여권하고 직접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전자여권은 물론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5년 9월에 사진전사식이 되었는데 2003

년도에 갈 것이 2년 반 정도 늦어졌습니다. 기계 선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2년 정도가 늦어졌는데 사진전사식 만드는 기계를 전자여권에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하면 어느 부분까지 할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 확정된 것은 현재 아니고 빌린 것을 얼마만큼 예산낭비적 요소를 없애면서 궁극적으로 보완성이 강화되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하는데 40여 개국 이상이 전자여권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영 위원 차관님, 여기 차관님 말씀대로 96쪽을 보면 전자여권 발급시스템은 상기 용역 결과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오는데 그것을 토대로 확정될 것인데 뭐하러 벌써 시스템에 대한 시범적인 것을 합니까?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현재의 사진전사식 방식으로도 충분히 전자여권이 가능한지도 여부도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미국 비자면제협정이 어차피 거부율 때문에 올해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렇습니다.

○이화영 위원 왜 벌써부터 전자여권을 미국 비자면제협정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도입할 시기적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또 96쪽 그 밑에 보면 전자여권 발급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추가모드를 장착해서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발급 장비를 활용한다는 계획에서 지금 갑자기 대형 발급기 신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전문위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97쪽을 보면 기타의 수다한 문제가 있습니다. RFID 칩에 수록된 정보의 범위, 여권법의 개정 필요 여부, 조폐공사 재조 위탁의 타당성 여부,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와 그 대책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범사업을 도입해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제 의견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질의 답변은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한 번씩만 하십시다.

내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전자여권 발급 전체 프로젝트 총액이 얼마입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조폐공사에 의뢰하면 그 부분은 조폐공사가 기계하고 다 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기계가 설치된 후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경비들, 공백 여권 만드는 데 따르는 경비, 그런 것들이 아직 다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전체 프로젝트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현재 그 기계 구입에 따른 것은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200억 정도 되는 포션은 중앙집중식으로 했을 때 그것은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그 전자여권 시스템에서 심사관 약 140명을 추가로 뽑아야 되는 부분, 또 각 250개 정도의 접수하는……

○小委員長 朴鍾根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너무 자꾸 상세하게 설명하려 하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권관리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김봉현 당초 저희가 계획했을 때 조폐공사에다가 넘기지 않고 저희가 여권발급센터 건물까지 확보했을 때 거의 500억까지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폐공사에 위탁해서 조폐공사에서 그 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공백 여권 만드는 것이라든지 발급을 했을 때 거기에 300~400억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축해야 되는 것은 주전산망입니다. 250개 접수기관에다가 전산망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지문이나……

○小委員長 朴鍾根 너무 상세하게 하지 말고 대강 하세요, 대강.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김봉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100억 정도의 돈은 있어야 내년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조폐공사에 300억 들고 외통부에서 100억이 들고 그러면 400억 프로젝트네요,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그렇게…… 140명 정도의 인원을 앞으로 매년 써야 되는 부분 또……

○小委員長 朴鍾根 답변을 단답으로 하세요. 400억 프로젝트입니까? 아직 모릅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것을 400억이라고 기존……

인프라 들어가는 부분이 400억 대에서 50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외교통상부다운 프로젝트 추진 방식입니다. 전산을 구축하려면 전산 전문회사에서 제안서를 딱 받아가지고 전문가가 딱 검토를 해서 조폐공사는 무엇을 하는 데 얼마, 외교통상부는 뭐하는 데 얼마, 인력은 몇 명이 소요되고, 그래서 언제까지 프로젝트를 끝내서 1년에 전자여권을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것은 사실은 현재 용역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여기 전문위원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뒤로 좀 미룹시다.

○고흥길 위원 저희 의견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증액 요청 감액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국제기구분담금 이 문제를 어떻게 금년 내년도 예산에 일괄적으로 다 끝내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008년도까지 나누어서 할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 해외동포재단 출연 이것을, 38억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더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재외동포 임시 보호 지원 신설, 이것은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어 넣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전자여권 문제는 이것을 전액 삭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비만 내년에 주느냐, 용역비 이것만 주느냐……

용역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이것을 다시 한다면? 지금 용역이 나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김봉현 예,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하면 사업자로 하여금 구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업체로 하여금 자기 자금으로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고흥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49억 원만 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김봉현 그렇습니다.

○고흥길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그 문제 그 정도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1억, 12억 이런 것은 다 때려치우고……

○小委員長 朴鍾根 김무성 위원님.

○金武星 委員 부에서 요구하는 증액 금액이 별로 그렇게…… 작은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이것은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자면제 프로그램 홍보 컨설팅, 로비 고용인데, 비자 면제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기준에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한 2~3년 사이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일단 이번에는 3.6%대가 안 되고요……

○金武星 委員 안 될 일을 갖다 괜히 돈 쓰면서 돈 버리는 것인데, 왜 그런 아까운 일들을 해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계속해서 의회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요.

○金武星 委員 아니, 미국의 기준 안에 들어갈 때에 로비스트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데 괜히 안 될 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이 아까운 달러만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액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그 중의 하나……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가만, 토론은 하지 말고 서로 의견만 한 번씩만 나누고 끝내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런 것이 아닌 몇 가지……

우리 북미국장이 조금 설명을 위원님께……

(「조금 있다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金武星 委員 전자여권 개발 이것 2005년도 9월에 전사식을 했다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렇습니다.

○金武星 委員 이때 이미 우리나라 국내 기술 가지고도 RFID 시스템을 다른 데 다 적용하고

있는데 왜 이때 이것으로 갔어요? 처음부터 RFID 시스템으로 가지?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RFID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金武星 委員 그것이 전자여권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도 다 이것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95년도에 내무부 차관을 했는데 그때 이미 전자주민카드를 만들려고 그렇게 다 준비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개발된 것이 RFID카드입니다. 훨씬 더 용량이 커지는 것이지요.

2005년도 9월 이때는 국내 기술이 다 개발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왜 뛰어 넘을 수 있는 기술을 또 한 시대 갔다가 지금 와 가지고 또 2년 만에 이것 안 된다 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한 비용 다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겠다, 지금 이것 아니에요, 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2003년도에 원래 사진 전사식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제 실시된 것이 2005년 9월이라서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게 느낍니다. 그 당시에 조금 더……

○金武星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 필요 없고, 이것은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고 전 세계가 다 이리로 가고 있고 지금 국내 일반 민간회사에서도 출입증이니 뭐니 다 이것으로 가고 앞으로는 불과 2~3년 안에 모든 제품에도 RFID 시스템이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재고관리 같은 것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국내 기술이 이것을 커버할 수 있게끔 개발이 다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 전자…… 주민등록증도 가야 되는데 하물며 여권은 당연히 이리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2년 전에 이것을 할 때 이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 전 단계에 갔다가 지금 이리로 가려고 하니까 이 아까운 돈 버린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지요.

○이화영 위원 그런데 그 전 단계가 아니고 현재의 사진전사식에 이 칩을 그냥 부착하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지금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 당시 외교부의 입장이었어요. 지금 그것도……

○金武星 委員 부착하면 안 돼.

○이화영 위원 아니, 그것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판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기계를 도입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중앙집중적으로 크게 해서 대량으로 나가는 것이 더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느냐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지금 용역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1억 1900만 원입니다.

○金武星 委員 큰 돈은 아니지만 이미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듣기에 이것을 외국회사하고 용역하고 그랬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국민영사국장 김봉현 아닙니다. 우리 국내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국내 회사하고요?

○외교통상부여권관리관 예, 그렇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러니까 이게 전자여권에 새로 적용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모든 출입증이 이것으로 다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 특별나 기술도 아니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이리로 가야 됩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2년 전에 했던 이렇게 예산 들여놓은 것이 아까워서 바꾸는 것이 그렇다 하면……

지금 우리 당의 정책위 의견은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다음에 16번 재외동포 일시 보호 지원.

그런데 지금 탈북자가 재외동포입니까? 공식 명칭이 뭡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탈북자라고 했으면……

재외동포 임시 보호 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뭐로 바꾸어야 돼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래 저희들이……

○金武星 委員 그것 보니까 지금 외교활동비로 되어 있던데?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지금 외교활동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외교활동비에 말하자면 탈북자에 대한 예산을 숨겨 놓은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외교활동하는 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탈북자들 관리하는 데 돈 뺏겨버리고 할 일도 못하고, 지금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탈북자가 아마 훨씬 더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물론 태국이나 중국 베트남 등의 물가하고 우리나라 물가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만, 지금 하나원에서 새터민들 하루에 3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하루에 5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5불이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金武星 委員 그나마도 예상되는 숫자에 비해서는 전체 금액이 적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14억 증액 요구되었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14억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이것 한 20억 정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제가 그 명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탈북주민들에 대해서 공관에서 보호하고 또 입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외교활동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교활동비의 성격에 맞지 않은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되, 지금 외교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보호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 사업의 명칭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원래 법명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해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쓰게 되면 이 사업명 자체에서 이미 그러한 명이 내포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해서 재외동포 임시 보호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재외동포라는 그 개념이 외통부에서는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외동포라 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한국 국적은 안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피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탈북자도 있고 이런데, 그 개념이 전부 재외동포라 이렇게 하면 다 커버합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저희도 이 새로운 항목 사업을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 기획예산처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할 사안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어떤 제목을 붙이더라도 재외동포 임시지원이 기존에 여러 가지 재외동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독립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안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북한인권 유엔결의안에 우리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당당하게, 좀 순화된 표현을 쓰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그 목적에 맞는 당당한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좋은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내부적으로 좀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배 위원님.

○배기선 위원 이것 하도 여러 번 되풀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대체로 외교부나 위원님들이 지금 외교 예산이 너무 적다 일반적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데 대체적으로 공감이고, 특히 아까 제주평화포럼 같은 경우에 감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반드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살렸으면 좋겠고요.

북한 핵 문제 대처 및 6자회담 참가 이 부분은 상징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줄어든 게 아니고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마치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므로 이것도

올렸으면 좋겠고, 국제기구분담금 이것은 이번에 다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전자여권 개발,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외한의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얘기를 제3자 입장에서만 들어 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작년에도 없던 예산을 기획예산처하고 씨름을 해서 다시 새로 확보하신 것 같은데 꼭 반드시 반영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어떤 시스템을……

○최성 위원 좀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설명을 해 주세요. 설득 안 하면 삭감될 것이니까요.

○배기선 위원 아니면 이것을 내년에 해도 되는 겁니까, 금년에 반드시 해야 될 특별할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전자여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의 필연입니다.

○배기선 위원 그것은 김무성 위원도 말씀하셨고……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전자여권을 만드는 기계, 어떤 시스템 그 부분은 지금 미정입니다. 그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가장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또 낭비적 요소가 적게 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전자여권으로 가는 데 들어가는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45만 권을 만드는 전제하에서 곱하기 1만 원 해서 45억 원을 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꼭 45만 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하셔도 저희들이 다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으로 가는 것은 일정 부분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화영 위원 차관님, 제가 한 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용역 결과가 현재의 사진전사식 방식에 의해서 전자식 여권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분산식 방식으로 하는 것의 효용성이 더 높다고 하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와 만약에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여권 발급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때 우리 국민들이 당장에 여권 발급받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의 혼란과 혼동 이런 부분에 대한 완벽한 예방장치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실험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자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께서도?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면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게 국민들이 더 편할 수가 있고 기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방향의 턴을 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랬을 경우에 그 효용성 대비 지금의 예산 낭비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낭비보다 그 효용성이 큰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 용역 결과도 봐야 되지만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억 원을 증액하고……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49억의 내역은 전자여권을 저희가 10월, 11월……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사관 모집하는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심사관 모집을 140명 해 가지고……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50명을……

○이화영 위원 15억 원을 집행해 가지고 심사관 모집했다가 이 시스템으로 만약에 결정 안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小委員長 朴鍾根 됐습니다. 어지간히 정체는 다 드러난 것 같으니까 빨리 넘깁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2억씩, 3000만 원씩 이렇게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외교통상부에서 알아서 조정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통과가 된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손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조정은 일단 예산안 원안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꼭 올려야 될 것, 꼭 깎아야 될 것 이것만 토론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항, 2항은 원안대로 가고 3항을 토론하겠습니다.

3항은 감액의견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6자

회담이 선결과제인데 격년제로 제주평화포럼을 해 가지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화영 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위원장님, 이것은 지속돼 온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가 하와이포럼처럼, 하와이에서 세계 석학들을 모아 가지고 국제적인 외교포럼을 하듯이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그 평화의 섬에서 세계의 이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2년 단위로 포럼을 했었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사업이 갑자기 잘못 이해가 돼 가지고 제주평화연구원의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왜 이것을 또 하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돼 온 사업을 지금 단절시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매년 2억 원씩 이렇게 지원……

○小委員長 朴鍾根 이게 몇 번째입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네 번째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8년 동안 계속해 온 겁니까?

○이화영 위원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황도 이뤘고 잘 정착되어져 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잘 안착되어 가고 일반화가 되어 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金武星 委員 여기에 어떤 분들이 왔어요?

○최성 위원 이 포럼을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제주평화연구원이……

○최성 위원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거기에 지금 설치돼 있고 권영민 부원장하고 김세원 교수가 이사장이고요.

○金武星 委員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참석은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제가 고르바초프가 왔었던 것은 기억하는데요. 소위 한반도, 동북아지역……

○小委員長 朴鍾根 담당 실무, 책임자 없어요?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기획심의관 조윤수 금년에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 그다음에 모리 전 수상…… 리더들이 거의 초청이 돼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서 고담준론을 듣는다 그 말이지요?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기획심의관 조윤수 다른 나라의 역할 이런 것……

○金武星 委員 넣읍시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살려주고, 북한 핵 문제 대처 및 6자회담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하고 영유권 공고화 이것도 원안이고……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위원장님, 6자회담 대처 및 참가 그 부분은 사실 예산 편성할 때에 앞으로 내년도의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화영 위원 이것은 한 5억으로 증액을 해서 전년도 대비 100% 증액했다 이런 것을 딱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억 4000만 원에서 5억으로 해서……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기획심의관 조윤수 저희가 2억 4000만 원으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했는데 요청은 8.5억 원 정도 해서 3배 정도……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5억 정도로 하면……

○小委員長 朴鍾根 05년에는 이것 얼마였어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2005년도에는 6자회담에 대한 별도가 없어 가지고 북미국예산에서 썼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05년에는 1억 2600을 썼습니다.

○최성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전자여권 개발비 49억이 삭감되느냐, 아니면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삭감이 될 경우는 49억을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그냥 한 건, 한 건 처리하지요. 더 깎았다고 당겨 쓰자 이 말이에요?

○최성 위원 아니, 49억이 감액되면 감액하는 대신에 다른 의미 있는, 영유권이라든가 6자회담이라든가 인권 문제, 탈북자 이런 데 하게 되면 의미가……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6자회담은 삼각형으로 해 놓고 일단 넘어가 봅시다.

국제기구분담금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얼마를 더 올려달라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지금 이 증액된 예산 외에 7000만 불 해서 665억 정도를……

○金武星 委員 유엔 분담금은 다 완납하자 이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것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小委員長 朴鍾根 660억을……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죄송합니다. 653억 원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653억을 올려 달라?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小委員長 朴鍾根 지금 체납된 게 전부 얼마인데?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7000만 불인데요. 금년 말까지 약 1억 1000만 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어디에 지금 체납이 돼 있어요? 7000만 불의 내역이 뭡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대부분은 PKO 분담금으로 돼 있는데요.

○小委員長 朴鍾根 PKO 분담금이 얼마예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지금 지불하지 못한 것이 한 육천몇백만 불 정도, 제가 정확한 액수가 없습니다마는 PKO 분담금 체납액이……

○小委員長 朴鍾根 실무 책임자 없어요? 차관님이 숫자를 모르시면 뒤에서 탁탁 얘기를 해 줘야지 뭐 하려고 앉아 있어요?

○외교통상부외교정책실국제기구국장 강경화 죄송합니다.

10월 말까지 PKO 체납액이 9000만 불에 이르렀고요. 연말까지는 한 1억 2000만 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소책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4000만 불이 이미 증액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괄해소 차원에서 한 7000만 불 더 증액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지금 7000만 불만 주면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金武星 委員 이것은 국가 체면이 걸린 문제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7000만 불 중에 PKO가 얼마냐 이거예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7000만 불이 생긴 게 다 PKO 분담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100% PKO 것이라는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외교정책실국제기구국장 강경화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이 7000만 불을 안 주면 다른 것은 다 해결되고 PKO 것만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이지요?

○외교통상부외교정책실국제기구국장 강경화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렇기 때문에 PKO 7000만 불은 PKO 체납금을 100% 해소함으로써 PKO 이외에는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고 PKO만 7000만 불 남는다 그 말 아닌가요?

○金武星 委員 내용은 PKO지만 전체 그림은 유엔 분담금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小委員長 朴鍾根 차관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외통위에서 올려놓으면 정부에 가서 통과시킬 자신 있어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협조를, 상임위에서 올려 줘야 할 수 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반기문 총장까지 됐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할 때 왜 7000만 불을 반영 못 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것은 내년도에 일단 4000만 불이 생기는, 토털 1억 1000만 불 중에서 4000만 불은 갚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이미 733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7000만 불은 2008년도에 갚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짰을 시점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총장이 꼭 되실지, 안 되실지 불확실한 상태였는데 이제 사무총장이 됐고 2008년도에……

○小委員長 朴鍾根 설명을 좀 간단히 하세요. 반기문 총장이 돼서 더 준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웃음)

그래서 700억을 올려달라 이것이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아닙니다. 700억은 이미 올라가 있고요. 추가로 653억 원을 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653억을 올려주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흥길 위원 제가 사실은 반대를 했는데 뭐 사정이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하나……

○小委員長 朴鍾根 이것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축하금으로 한나라당에서 선심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받으세요.

(웃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7000만 불을 말씀하셨는데……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기획심의관 조윤수 환율 변동이 조금 있는데요. 7000만 불이 한 663억 정도 됩니다.

○최성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665억이 아니고 663억입니까?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기획심의관 조윤수 예.

○小委員長 朴鍾根 수석,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것은 계산해 가지고…… 660억 내외로 우리가 결정해 줄 테니까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나중에 반영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것은 예산처에 가서 해도 돼요.

대일 예방외교도 이름만 고치기로 하고 넘어가고요.

북미지역하고 아·중동지역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중남미쪽만 깎아놓았네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3300만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네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북미지역 관련해서 김무성 위원님께서는 깎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최성 위원 한나라당이 한미동맹 강화를 워낙 강조하시기 때문에 반대 안 하실 겁니다.

○金武星 委員 그런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600억을 집어넣는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화영 위원 600억 아닙니다. 6억입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6억에서 14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북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얼마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저희가 14억을 추가로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14억을?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小委員長 朴鍾根 차관이 부탁하니까 봐 줘야지요.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도 이해봉 위원이 한마디 해 놨네.

○이화영 위원 이것도 상징적으로 재외국민에 대해서 영사서비스가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작은 액수지만 올려 가지고 더 확대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KO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외교부의 일반외교활동비가 14% 가까이 전년대비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마구 깎인 것들이거든요? 기계적으로 깎은 것인데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줘야……

○小委員長 朴鍾根 이것을 얼마 올려주자는 거예요?

○이화영 위원 작년 규모 이상으로는 가야 된다는 거지요.

○金武星 委員 1800만 원 정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고흥길 위원 그런데 이렇게 1800만 원 올려주는 것은 기획예산처 친구들 약만 올리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지.

○小委員長 朴鍾根 놔두려면 놔두고 올려주려면 18억을 올려주면 되는데 1800만 원 소위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외교부에서 전용을 해서 쓰든지 해야지. 국회에서 왜 1800만 원을 조정하나…… 이것은 넘어갑시다.

○고흥길 위원 그럼, 조정은 말도 안 되지.

○小委員長 朴鍾根 재외동포재단 출연인데 재외동포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아직 못 받으셨지요? 재외동포재단을 전반적으로 보고 이 출연이 필요한가, 안 한가……

○고흥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지난번에 진영 간사를 모시고 갔었는데 땅까지 거기서 주고 운영도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7억 정도면 한 100명 수용할 수 있는 양로원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미 잡아놓은 땅이라든가 건물 같은 게 완전히 허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외동포재단에서 3억 잉여금이 남아있는 게 있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구홍 최대 노력하면 3억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흥길 위원 그러니까 17억 중에서 14억, 그러니까 15억을 특별히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15억 해 주시면 예결위에 어떻게해서든

지 같이 협력해서……

○小委員長 朴鍾根 전문위원님, 재외동포재단에 출연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지금 고 위원님 말씀은 출연금액 자체를 늘리자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저희 검토의견은 이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축적을 해 놨는데……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재외동포재단에 출연을 해 가지고 이 돈을 보태서 내년도 재외동포재단 운영계획이 다 나온다고. 재외동포재단 운영계획을 볼 때 이것을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고흥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돈을 줘야지 운영계획에 그것을 구입을 하지요.

○小委員長 朴鍾根 운영계획에 예산이 없어요?

○고흥길 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구홍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익잉여금이 19억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재단 측 주장은 2007년도 집행예정액도 있고 2006년도 집행액도 있어서 최종보유예정액이 3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구홍 예.

○이화영 위원 전문위원님, 이익잉여금이 어떤 게 맞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저희가 말씀드린 19억 중에는 내역을 보면 전산장비시스템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그렇게 쓰겠라고 들어와 있는 게 한 5억 5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 임차보증금으로서 9억 9600만 원 정도를 쓰겠다……

실제로 19억 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판단해 주실 사항은 재외동포재단의 출연을 늘려서 우즈베키스탄의 독거노인을 위한 예산을 재단의 부담없이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재단이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털어서 그것으로 독거노인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재단 운용계획을 짤 때는 이익잉여금까지 넣어 가지고 짜는 것 아닙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구홍 이게 장기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총리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서……

○小委員長 朴鍾根 전문위원, 재단운용계획서가 어디 있어요?

이익잉여금이 얼마 축적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2006년 말 현재 약 1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수입으로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사후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수입에도 잡고 지출도 잡고 다 해야지. 왜 표시 자체가 안 돼 있나? 이익잉여금은 가용재원이 아닙니까?

○고흥길 위원 가용재원은 3억 48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거기에다 우즈베키스탄 항목을 하나 넣어서 14억을 넣어줘야지요.

○小委員長 朴鍾根 우즈베키스탄 이것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고흥길 위원 새로 항목을 신설을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만약에 한다면 별도의 항목으로 사업비를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을 늘릴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금액을 증액……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소외 및 특수지역사업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고흥길 위원 거기에 단서를 붙이면 되지.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중요한 것은 정부출연금을 증액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감독은 어디서 해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재외동포영사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재외동포영사국 누가 있어요? 출연이 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기획심의관 조윤수 출연이 추가적으로 되면 가능한데 지금은 잉여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재단하고……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여기 사업비가 274억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다 확정됐느냐고.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기획심의관 조윤수 예.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이것은 완전히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동포재단에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이화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총리가 가셔서 우즈베키스탄의 한인사회하고 약속을 하고 돌아

온 사안이기 때문에……

○金武星 委員 15억을 올려주고 알아서 하도록 하면 되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 여기에 해 주게 되면 다른 데도 다 해 달라고 할텐데 그것 어떻게 감당합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사실은 그렇게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관리하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매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2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저희들이 이것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고흥길 위원 연간 운영비가 2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이게 국영이면 매년 운영비도 부담을 해 주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사기업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이화영 위원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이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했던 선조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된 지 70주년인데 이 노인 분들이 대개 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후손들인데 현지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십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연방이 붕괴되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떨어졌는데 우즈베키스탄이 굉장히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제이주된 민족의 비극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금사업으로 여유가 있으면 해 주면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여유있게 짜여져 있는지 아니면 여유가 하나도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데 290억을 운영하는 계획 중에 15억도 여유가 없다는 설명이 첫째로 납득이 안 가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구홍 위원장님, 제가 취임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재외동포재단 현황은 소위 한글학교에 월 120불, 이것을 개인도 아닌 나라가 120불을 주는 정도로 짬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아가씨가 물어요. 왜 그러냐니까 '전산시스템 정비 내년에 하신다는데 금년 말까지 안 하면 전산시스템 전체가 마비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재단의 상황이 아주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즈베키스탄 사업은 재단의 기본사업이 아니었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총리님이 방문해서 내년에 한·러 이주 70주년 등등을 고려해서 하신 건데 특별자금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재단은 아까 말씀한 대로 최대한 3억 정도 이외에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화영 위원 이사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재외동포재단 일반회계 예산을 국제교류기금에서 가져오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사장님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국무총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개선하겠다라는 구두약속은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선해서 국제교류기금이 본래의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은 어떤 형태가 되든 일반회계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 조직 자체의 변화라도 꾀해 보겠다, 이런 말씀까지 총리께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원인데 지금 내려가서 그것을 다시 확인할 텐데요. 이번에 어렵지만 기금에서 15억을 더 출연하셔서 그것을 전제로 반드시 우리가 하기로 하고 우즈베키스탄 양로원사업에 15억을 더 출연해 주시고…… 이익잉여금에서 돌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재단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2005년부터 113억, 6년도에는 156억 또 251억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현재 상태로 봐서 원기금에서 21억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10년 정도면 기금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렇게 곶감 빼먹는 식으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완전히 빼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그런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21억은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보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동포재단에

서 해 주시든지 외교부 예산에서 해 주시든지 하시고 현재 우리 기금의 잠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2년을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화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흥길 위원님, 이것을 재외동포재단 출연금으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고흥길 위원 일반회계로 해도 좋지요.

○이화영 위원 이것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수석전문위원께서 어디로 넣는 게 좋은지 예결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러시면 고려인 독거노인사업 17억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일단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연구해 가지고 확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 독립운동하던 후손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무국적자도 있다면서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 가서 고생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획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외교통상부가 의지를 보여야 되지, 외교통상부가 전혀 의지를 안 보여서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전혀 의지를 안 보인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상당히 참 섭섭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예산처하고 얼마나 싸우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같이 노력하고 그랬는데……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런 것은 '기획예산처하고 싸워서는 도저히 못 이기겠으니까 국회에서 얼마로 올려주시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한번 싸워보고 지면 차 버리고 이러잖아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위원장님, 예산처 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예산처가 얼마나 센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웃음)

○小委員長 朴鍾根 안 그래요. 넘어갈 때는 쉽게 넘어간다고요.

다음에 전자여권 개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 사장을 5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회사로부터 용역제안서를 받아서 공짜로 '너희가 와서 테스트해 봐라, 합격하는 만큼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하러 용역을 줘요? 시설 주고 소프트웨어 갖다 대고 자금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너 제안서 내고 와서 테스트 해 봐라'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테스트도 안 됐고 사람도 안 뽑은 것 보니까 제 예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아닙니다. 전액 삭감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이게 전자여권개발비 아닙니까? 전자여권발급비가 아니잖아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을……

○小委員長 朴鍾根 하드웨어 사고 소프트웨어 끼우고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빼내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면 하드웨어는 뭘 사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뭘 끼워서 하면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최성 위원 오늘 위원장님 독무대입니다.

(웃음)

○小委員長 朴鍾根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된다 하는 제안서가 나오고 나서 예산 반영해야 됩니다. 여당에서도 반대를 하시고 한나라당도 반대했으니까 이것은 삭감……

○배기선 위원 저는 반대는 아니고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위원장님, 완전 삭감하시면 전자패스포트 사업진행에 큰 차질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기획심의관 조윤수 외교관 여권하고 공무원 여권을 시범적으로 해서 갖고 다녀야 하거든요.

○이화영 위원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앙집중식 전자여권발급기를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비용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 경비는 조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화영 위원 그것은 아닌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람도 뽑고 시스템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효용성에 대해서 용역도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사진전사식 방법의 도판기계 도입한 77대에다가……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도판기계 100대를 다 쓰더라도 그 100대가 모여 가지고 연결하는 전산망 구축을 해야 되고 구축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도판기를 쓰든 대형기를 쓰든 간에 그것을 까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차관님, 그러니까 제안서를 딱 받아보면 하드웨어는 얼마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는 얼마고 운영하는 데 몇 사람이 어떻게 운영해서 1년 경비가 얼마 든다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을 차관님이 보시고, 또 전문가나 제3자한테 슬쩍 물어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자꾸 우기시면 됩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 내용이 어딘가에 있는데 거기에 가기 전까지 사업비를 전혀 책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예 그 내용까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안 그렇지요. 제안서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제안서에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프로젝트 프러포우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어로 해야 외교부는 통하나 도대체 왜 이래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을는지가 내년 1월에 나와 가지고……

○小委員長 朴鍾根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기는 식이에요.

○金武星 委員 지금 앞으로 이 시스템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고민하는 단계 같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이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장래의 사업입니다. 그것도 먼 장래가 아니라 바로 1, 2년 안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용역 줘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을 잘라 버리면 중단되어 버리지요.

○小委員長 朴鍾根 안 그렇다니까요.

○金武星 委員 그렇다니까요.

○이화영 위원 여기 49억의 내역을 보면 여권심사관 계약직 50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가 2억 2500만 원이고 조폐공사에 전자여권 완성품 제조 위탁을 위해 45억 원, 45만 권 곱하기 1만 원…… 이건 뭡니까? 조폐공사에 전자여권 제조 위탁을 위해 45억 원, 이건 뭡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제조비 파트 부분은 조금 조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진행되면 기존의 사진전사식 방식에 의한 전자여권 발급은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것이 전제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이 액수 산정은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도판기를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전자여권을 만들어 낼지, 지금 그 부분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화영 위원 지금 가격도 따져 봐야 될 건데 1권에 왜 1만 원씩이나 줍니까? 조폐공사가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1만 원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화영 위원 공백여권을 조폐공사에서 얼마에 사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지금 조폐공사에서 통화 발급을 하는 데 드는 돈이 시설물을 제외하고 200억 들어갑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우선 지금 공백여권을 얼마에 사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3000원 정도 됩니다.

○이화영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국제입찰을 하면 훨씬 낮출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공백여권이 5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만 원으로 다 계산해 놓고 그래서 45억 원, 그리고 45만 권을 지금 우리 차관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진전사식 방식을 도입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고 사진전사식 방식에 의해서도 RFID칩을 부착해 가지고 전자여권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0대의 도판기를 다른 용도로, 상설적이지 않고 비상설적인 용도로 재배치해 가지고 도판기를 억지로 끌고 가겠다, 반드시 그 도판기계를 섞이지는 않겠지만 용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폐공사가 수백억 원 들여서 외국제 중앙집중식 전자여권방식기를 도입해 가지고, 총 비용이 400억~500억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또 이렇게 변경된 방식이 맞는지, 얼마나 불편해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길들어져 있었는데 모든 시설을 또 다 바꿔 가지고 가서 사진 찍고 홍체 찍고 지문 찍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몇 달 기다렸다가 지자체 가서 배달받고 또 갔다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우선 접수하는 곳이 250군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小委員長 朴鍾根 차관님, 제안서 아직 안 들어왔지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연말에 들어옵니다.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기획심의관 조윤수 연말에 오는데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최소한으로 그 제안서가 제안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정하는 데 몇 달이 걸립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게 1월이나 2월 됩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 제안서가 쉽게 말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외교통상부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그냥 가지고 오는 대로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물론 그렇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전자여권 해 가지고 내년에 시범사업에 의해 적절한 규모로 해서 한 20만 권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권사진전사시스템은 왜 30억을 들여 또 확대합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30억 원은 제조할 때 들어가는……

○이화영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도판기를 추가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아닙니다.

○고흥길 위원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권발급소가 워낙 폭주하니까 현재 하는 방식을 좀 늘려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늘리지는 못하겠다 이래서 방법을 바꾸니까, 접수처를 많이 늘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화영 위원 지금 정확하게 사진전사시스템 30억 원의 근거는 뭡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것도 내역을 더 확인해야 되겠는데 준 것은 보안필름을 제외한 것이고요.

○이화영 위원 그것 보세요. 소모품비나 보안필름이나……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것은 금년도, 내년도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고흥길 위원 현재의 방법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병행하겠다 이거지요.

○최성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이 부분은 전액 삭감될 것인데 이 사업의 지속성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예산이 자체적으로 얼마는 유지되어야 외교부가 그래도 이 사업의 지속성을 추진하고, 그러다 그것이 성사되면 그때 예비비를 활용하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을 얼마까지 깎을 수 있어요. 사업의 지속성만을 보장하면서 삭감에 준할 정도로 최대한 줄인다면……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아까 그 내역하고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역을 저희들이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45만 권을 1만 원씩 해 가지고 45억 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50군데의 구청까지 내려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접수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하고 실제의 장비 문제, 그래서 그게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성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0억 정도를 배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을 계속시킬 수 있지 않은가……

○이화영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왜 20억이 드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것은 이게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접수창구를 지금 늘립니다. 시와 구까지 해 가지고 전체 해서 250군데, 그것은 행정자치부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런데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 보면 제조위탁을 위해 45만 권에 1만 원 계상해 가지고 45억 원, 이것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엉뚱하게 얘기가 나오네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제가 보기에는 그 내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고흥길 위원 위원장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권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난리니까 야당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하오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

해 그냥 눈 한번 감고 통과시켜 주고 내년에 이것 못 쓰면 남을 것 아닙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용도를 모르는데요.

○고흥길 위원 용도가 그것을 병행해서 하는 데 드는 것 아닙니까?

○최성 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 동의하는데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요. 만약 이것을 통과시켜 줄 경우 이화영 위원님이나 다른 분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후에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 이게 예산 낭비적인 요소로 지적될 위험성도 있거든요.

또 저희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일단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20억 수준만 유지를 하면, 외교부도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49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받아서 우선 증액하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화영 위원님을 포함한, 전문위원님을 포함한 이 제기에 대해 완벽한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럴 우려들이 없으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가하면 예비비를 쓰더라도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수준으로 한 20억이면 29억이 깎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정부는 정부대로 20억이니까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심각성을 감안해 가지고 보완적인 형태로 가면 저는 좀 절충적인 연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차관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게 시스템 구축비입니까, 아니면 여권 발급 비용입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여권 발급에 필요한 기계구입비 아닙니다.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스템으로 될지,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기계 도입하는 부분이 달리 있는데……

○小委員長 朴鍾根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시스템이 온라인화되어 가지고 지방에서부터 전산화로 다 된다는 얘기지요? 지방에서 접속해 가지고 중앙통제시스템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전자행정, 지금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것이요. 부산 것도 서울에서 금방 발급이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따로 여권용으로 구축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여권은 지금 개념으로는 다른 데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패스포트는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성이기 때문에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안 해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것은 접수에서 발급하는 곳까지 보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급에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하여튼 그게 컴퓨터로 다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것이 온라인 시스템 아닙니까?

○이화영 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올해 2006년도 예산에서 생체인식여권, 그 당시에는 전자여권을 생체인식여권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그때 얼마가 책정됐었지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5억……

○이화영 위원 5억 책정된 것 쓰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지금 일부만 썼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보고된 것을 보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용역 결과도 안 나온 상태인데…… 용역에 1억 쓰고 나머지 4억은 불용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외교관여권하고 관용여권을 시범 발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5억을 책정받았는데 지금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그 시스템 구축을……

○이화영 위원 그 5억 원으로 시스템 구축을 한다면 시스템 구축 비용이 얼마 든다라는 타당성 있는 제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더러…… 지금 대충 45억에서 한 20억으로 깎으면 시스템 구축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

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억 이상이 드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만 참여하는 민간업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화영 위원 그러면 개념이 또 다른 게 지금 조폐공사에서 45만 권의 여권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일인당 1만 원 해서 45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 다시 시스템 구축 비용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구축 비용은 또다시 지금 100억이 든다고 하는데 20억 갖고 뭘 합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8월 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한 그때의 로드맵상으로 봐서는 내년 10월까지 모든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외교관여권하고 관용여권을 5억 들여 가지고 테스트 오퍼레이션에 들어갈 계획이지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예.

○小委員長 朴鍾根 그것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용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그러니까 전면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시운전하면서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을 만들어서 그 여권을 가지고 외국 공항에 가서 이 여권이 스마트카드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RFID식으로 읽혀지고 작용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그 설명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외교관여권이나 관용여권은 전체 여권 중에 얼마 안 되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그것을 한 1년쯤 오퍼레이션 해 보고 다 되면 용역 할 것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확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반기 추가 예산을 쓰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것은 삭감합시다.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결론은 추가 경정을 나중에 추가해서 신청하세요. 완벽하게 용역도 떨어지고 시스템 구축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타나고, 또 용역 결과 이것이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게 나은지 분산식으로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기존의 사진전사식 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안하시고 이렇게 다 해 가지고 딱 떨어지게 와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외교활동……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小委員長 朴鍾根 자, 이제 토론 그만 합시다.

위원님들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이거 안 해 주시면 큰일납니다. 지금 2007년까지 50여 개국이 이러한 전자여권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이거 발급받은 사람을……

○小委員長 朴鍾根 이거 보세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준비가!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잖아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지금 그 돈 드는 것은 지금 민간……

○小委員長 朴鍾根 명세서 가져와 봐요, 명세서!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지금 그것을 삼성 SDS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우리는 여기서 돈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돈 49억 안 주면 큰일난다 그런 공갈치러 여기 왔네, 뭐 하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최소한도 이 돈을 주셔야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더 화나시기 전에……

아까 절충적으로 한 20억 정도면 이 사업의 지속성을 보면서, 그래서 완벽히 구축이 되면 추가 예산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때의 20억이 어떤 데 활용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비용으로 감액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측면이, 대충 깎는 게 아니라 어떤 최소 경비냐는 거예요.

그게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차관

님이 그냥 감으로……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아닙니다. 주 전산망 구축하고 접수장비, 판독기 그리고 심사여권 발급센터비 등 이런 액수로 20억 원으로 일단……

○최성 위원 그러면 깎인 29억은 거기서 뭐가 깎인 거예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예상한 돈이 잘못된 겁니다.

○최성 위원 그래 놓고 준비 다 됐다고 큰소리치시면 안 되지요. 29억이 2900만 원도 아닌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이게 어떻게 3억이 이야기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45만 곱하기 1만 원씩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전문위원, 이거 검토할 때 계획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아닙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모자랄지 남을지도 모르겠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큰일난다 하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돈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지금 외교관 여권하고 관용여권이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검증도 안 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경우에……

○최성 위원 위원장님, 더 흥분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저희들이 소위에서 결의를 해서 전체회의에 내면 어차피 전체회의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9억을 삭감한 가운데 20억에 준하는 좀더 제대로 된 안을 전체회의에 내놓고 그때 한번 더, 왜냐하면 이 여권 부분이 사실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또 만약에 여권 문제 문제 생기면 외교부가 소위에다 책임 전가하면 위원장님이 저기 할 수 있으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책임 좋아하네!

○최성 위원 농담입니다.

(웃음)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근거 가지고 하지……

○최성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종적 판단은 전체회의에서 하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전체회의에서 하면 안 돼! 전체회의는 내용도 모르면서 OK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성 위원 그 사이에 외교부에서 좀더 이 사업의 절박한 필요성 제안하게 하고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저희가 조금 더 정교하게 서류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 또 소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내주 월요일에 시간을 주시면……

○이화영 위원 최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럴 때 지금 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 RFID 칩에 수록된 정보의 범위, 여권법의 개정 필요 여부, 조폐공사 제조 위탁의 타당성 여부,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정확히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개인의 생체 전부를, 모두를 중앙집중된 하나에 몰아넣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많은 격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이건 급하다, 미국 비자면제협정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꼭 이것', 아까 세계 50개국이 한다 그랬는데 50개국이 다 중앙집중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솔직하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검증하고 합시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화영 위원 20억으로 하십시오.

○小委員長 朴鍾根 차관님, 내가 보기에 외교통상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은 내용도 모르고 보고만 받고 자꾸 우기는 얘기만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따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집행할 때도 당장 집행이 안 된다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까지 해 보고 전부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관여권하고 관용여권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다면서요. 그건 언제 테스트 끝납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아직 테스트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그게 언제 정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든 시제품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제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행정전산망 하는 것 하다가 자꾸 다운되고 착오가 되고 이래서 계획보다 몇 년 더 늦어져 5년 내에 끝내려 하다가 10년 걸린 것 아닙니까?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산 이것 4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 보니까 이 방에서 이것을 나만큼 더 잘 아는 사람 없는 것 같아!

○金武星 委員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 자형이 돌아가셔서 빨리 가야 될 입장인데 하도 답답해서 다시 하는데요.

만약 이게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사업을 못하게 되면 내년에 본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여권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2008년에 전자여권을 발급하지 못하게 되면 50여 개국이 전자여권을 발급을 해 가지고 상용화하는데 저희들은 준비가 전혀 안 돼서 2009년이나 10년이나 돼야 이 전자여권이 나오는 후진국이 됩니다.

○이화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반론하겠습니다.

전자여권은 말입니다.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에다 RFID 칩 하나 넣으면 되는 게 전자여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엄청난 새로운 게 들어 있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ICAO에서 여권표준화를 시킬 때는 여기 바코드 들어가는 걸로 돼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영 위원 ICAO에서 이미 그걸 공고했는데도 우리 외교부가 사진전사식을 고집해서, 말하자면 이미 ICAO에서 2005년 5월에 공고했는데 우리 외교부는 2005년 9월에 사진전사식 도입한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2000년에 개선한 것이 사진전사식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설명을 죽 들어보니까 외교통상부에 컴퓨터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외교통상부 지금 이 부분은 엉터리입니다.

제안서 받아가지고 테스트까지 딱 하고 그래 가지고 설치해라 이렇게 딱딱 나가는 거지 돈 얼마 드는지도 모르겠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金武星 委員 그런데 해야 될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는 것은 옳으신데 흘러가야 될 것을 갖다가 준비 잘못했다고 해서 중단시키는 것은 좀……

○배기선 위원 이게 그러면 삼성 SDS하고 개발 계약은 돼 있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선 위원 그러시면 이 얘기의 결론은……

○小委員長 朴鍾根 아주 긴급히 필요한 것을 우선 10억만 하고 그러고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거든 국회에 와서 브리핑하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알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브리핑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일류 컴퓨터 회사가 책임지고 작동을 시키고 완전히 책임지고 해 주겠다 하고 외교통상부도 보장하고 이러면 전부 다 줄게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데……

○金武星 委員 10억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小委員長 朴鍾根 돼, 돼.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여권관리관 이병국 지금 정부 예산이 없더라도 민간업체에서 수익사업으로 자기들이 돈 다 대 가지고 하겠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여권이라는 게 국가 보안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20억이 최소비용이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10억이면 되냐

니까 또 된다고 하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小委員長 朴鍾根 당신 설명하는 것 나한테 안 통하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자유무역협정체결 이거 그냥 원안으로 가고, 재외공관 리모델링 이것도 원안대로 가고, 차관님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재외동포 임시보호지원 이거 돈 얼마 필요합니까?

○金武星 委員 그런데 재외공관 리모델링 이것 말이지요. 지난번에 LA 총영사관 가보니까 처마가 처져 가지고 참 불쌍하게 보이던데, 폐가처럼 보이던데 왜 이거 안 고쳤냐 하니까 '예산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小委員長 朴鍾根 23억 사업내용 중에 LA 것 들어있습니까?

○외교통상부기획심의관 조윤수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다른 쪽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재외공관 리모델링 그 말씀하신 것은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앞서 재외동포 임시보호지원 14억 원은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재외동포 임시보호지원 14억……

○金武星 委員 20억 한다더니 왜 또 14억이라고 해요.

○외교통상부기획심의관 조윤수 기존 19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19억이 어떤 데요,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외교활동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아, 외교활동비에? 이거 독립시키세요. 합해 가지고, 그러면 19억 플러스 14억이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33억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33억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小委員長 朴鍾根 독립시켜서 33억 항목이 나오는 거지요?

○외교통상부기획심의관 조윤수 위원장님, 어떤 파트 중에서 어떤 것은 밖에 릴리스(release)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우선 시작하니까 항목은 2개로 해 가지고 14억은 그대로……

○小委員長 朴鍾根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수석전문위원하고 상의 잘 하세요.

○金武星 委員 그러니까 14억 올라가는 거예요.

○小委員長 朴鍾根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국제교류기금 원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위원장님, 교류재단이사장으로서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 감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예, 말씀하십시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21억이 기금에서 깎이는데요. 이것만은 어떻게 막아줘야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이번 외교부 예산에서도 얼마 삭감이 되는데 그 정도면 우리 교류재단 원금 보전이 될 것 같고 또 재외동포재단에서도 잉여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 조정하면 교류기금에서 빼가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서 2년 기한으로 임시 개정안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3억에서 251억으로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앞으로 기금이 고갈이 돼서 재외동포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교류재단마저도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테니까 우선 현재 상태에서 마이너스 되는 21억 만이라도 좀 보전해 주시고 차선책으로는 법을 다시 재개정하는 방법을 추진해야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출연에 21억 올리면 됩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예.

○小委員長 朴鍾根 21억 OK.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재외동포재단 출연금에서 21억이 줄어지는 겁니다. 재외동포재단을 251억을 지원하는데 21억을 적게 주겠다 그겁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이것은 재외동포재단에 출연하는 게 아니고 이것 재외동포재단에다가 정부예산이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이화영 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될 경우 사업에 문제없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구홍 안 되지요. 21억 깎으면 저 이사장 관둘 테니까 재외동포재단 문 닫으세요.

이번에 좀 올려주십사 하고 왔는데……

○이화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형태로 기금에 보전될……

지금 기금 수입 내년도 수입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내년도 예산이 320억입니다.

○이화영 위원 이사장님이 이번에는 좀 이해를 하시지요. 저희가 내년도에 법 바꾸고 기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재외동포들 들고 일어나 버리지요.

○이화영 위원 재외동포재단 예산 깎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아니, 그러니까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외교부에서 이번에 깎였으니까 그 돈을 재외동포재단에 주면 되지 않느냐……

○이화영 위원 일반회계에서 추가하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그렇지요, 정부출연금으로 정부에서 삭감되는 그만큼을 재외동포재단에 주면 우리가 재외동포재단을 그만큼 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화영 위원 그 21억 원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어떤 거라 그랬었습니까? 21억 원이 어떤 부분이라고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그것이 총 합해서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기금 사용 예산에 21억이 적자가 되는 겁니다.

○최성 위원 아니, 외교부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어디가 삭감이 됐는데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아까 전자여권 뭐……

○최성 위원 다른 게 다 증액이 됐잖아요, 토털로 보면……

○고흥길 위원 다른 데 다 증액시켰지요.

○이화영 위원 아, 그쪽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그러니까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서……

○이화영 위원 이사장님 이번에 한번 이해하십시오.

○배기선 위원 기금 문제는 따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아까 북한 핵문제 대처 및 6자회담 참가에 얼마를 증액을 해 주시는 것인지?

○이화영 위원 지금 현재 2억 5000만 원인데 100% 증액되는 겁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번호가 몇 번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4번입니다.

○배기선 위원 이것은 회담을 제대로 해야 되고 금년 12월부터 시작이 될 거니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8억 5000만 원 그대로……

○小委員長 朴鍾根 얼마 필요하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저희는 8억 5000만 원을 건의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순증이 8억 5000만 원?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아니요. 다 합해서. 그러니까 순증액은 6억 1000만 원.

○최성 위원 북한 핵문제 대처 및 6자회담 이 항목이 사실은 많거든요. 포괄적인 외교역량 강화에 들어가니까. 중국, 일본, 대외 외교 강화이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을 시키죠? 북핵외교에 여야가 적극적인 협력을 했다는……

○小委員長 朴鍾根 8억이면 8억이고 9억이면 9억이지 8억 5000만 원은 또 뭐죠? 이런 것은 비용 명세가 있는 것도 아닐 건데.

○고흥길 위원 그것은 외무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신청했던 안이니까 그것보다 더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상복귀해 주는 거다 이거죠.

○小委員長 朴鍾根 8억 5000만 원?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합이 10억 8600만 원으로?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아니요. 순증은 6억 1000만 원이고요, 기존에 2억 4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합이 8억 5000만 원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합이 8억 5000만 원이 된다? 6억 1000만 원을 증액시켜 달라?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小委員長 朴鍾根 6억이면 6억이지 또 6억 1000만 원은 뭐요? 아이고 참. 6억으로 해요, 6억으로.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6억 증액 들어가고.

○이화영 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예.

○이화영 위원 임종석 위원께서 말씀해 달라고 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인유권자운동을 하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한인 뭐?

○이화영 위원 한인유권자운동. 미국사회에서 정계에 진출하도록 하고 유권자로서 등록 운동을 하는 단체들인데,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계상됐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됐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렇습니다.

○이화영 위원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4500만 원을 다시 반영해 달라는 게 임종석 위원님의 의사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어디다 반영해야 돼요?

○이화영 위원 그냥 순증시키면 되는 거죠.

○小委員長 朴鍾根 어느 항목에다?

○최성 위원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결위 가서 한 번 더 협의를 하더라도……

○고흥길 위원 순증시키는 것은 이 위원께서 가서 끝까지 관철하시면 됩니다.

○이화영 위원 예, 제가 알아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안 들어 있는 것인데, 동북아에너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에너지 대화가 4000만 원이 돼 있고 동시베리아·극동개발 협력기반 조성비가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래 외교부에서 얼마 신청됐습니까? 동시베리아·극동개발 협력기반 조성을 기획예산처에 처음에 얼마 올렸습니까?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재정기획관실서기관 김홍기 작년에 최초로 50억 신청했습니다.

○이화영 위원 그런데 50억이 8500만 원이 됐습니까?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재정기획관실서기관 김홍기 예.

○이화영 위원 지금 이쪽의 에너지 협력에 관련된 외교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도 5억인가 올려서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이화영 위원 일단 우리 본 위원회에서 5억 정도를 올려 놓으면 예결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이르쿠츠크, 사할린 이 일대의 협력강화 사업이 부쩍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小委員長 朴鍾根 이거 어느 예산입니까?

○이화영 위원 어느 예산입니까?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재정기획관실서기관 김홍기 에너지자원외교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에너지자원국이라고 있어요?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재정기획관실서기관 김홍기 에너지자원외교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소위 안건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고흥길 위원 고흥길 위원께서 지난번에 정책질의를 할 때 에너지자원외교를 강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거 어디에 넣으면 되는 거요?

○이화영 위원 동시베리아·극동개발 협력의 기반조성 사업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고흥길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21세기한중교류협회인데 금년도 예산배정이 3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1억이 돼 있는데 다 반영이 됐습니까?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재정기획관실서기관 김홍기 한중친선협회 말씀입니까?

○고흥길 위원 21세기한중교류협회.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재정기획관실서기관 김홍기 저희가 그동안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한 곳은 한중친선협회이고요, 그 예산 자체가 내년도에는 기금사업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돼서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고흥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3000만 원 줬으면 내년에도 3000만 원 그냥?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재정기획관실서기관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고흥길 위원 더 이상 증액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고?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재정기획관실서기관 김홍기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한중?

○고흥길 위원 예, 21세기한중교류협회. 이것이 옛날에 장관했던 김한규라는 양반이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 내용이 외교통상부 아태국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라는데 맞아요?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재정기획관실서기관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고흥길 위원 이것을 내년 사업에서 1억으로만 증액을 시켜 달라는데, 우리 정책위의장님의 각별하신 지시인데.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 것은 그렇게 못 올려. 교류협력하는 데 3000만 원짜리가 어떻게 갑자기 1억으로 어떻게 올라가노?

그냥 작년 수준으로, 빼지 말고.

(장내 웃음)

○최성 위원 충분히 말씀하셨고……

○小委員長 朴鍾根 꼭 좀 하세요, 작년 수준으로.

○외교통상부기획관리실재정기획관실서기관 김홍기 지금 현재 30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아까 말씀하셨던 1억 4000…… 다 합해서 얼마예요?

○이화영 위원 다 합쳐서 5억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임종석 위원이 얘기한 거.

○이화영 위원 4500만 원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리고 에너지자원외교는 얼마?

○이화영 위원 5억.

삭감될 것 각오하고 저희가 한번 가서 해 보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이것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더 올려 주죠? 그래서 5000만 원.

(장내 웃음)

○최성 위원 그렇게 하시죠? 증액해서, 나중에 예결위 갔을 때 그렇게 하든지……

○小委員長 朴鍾根 그것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민간교류 협력단체가 좍 있습니다. 있는데, 외통부에서 알아서 다 나눠주고 있다고. 그런데 국회 빽을 이용해 가지고 3배로 올려 먹겠다 하는 배짱이지.

○고흥길 위원 하여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증인들이 계시고……

○최성 위원 저도 지원을 했드렸는데도 불구하고……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작년 수준으로 확실하게 지원하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말이지 그렇게 3배로 올라가야 되는 아무런 이유도 없잖아요. 일본도 지금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나보고 만날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 일본말 좀 잘하는 사람 오면 전부 다 자기 찾아오는데 이제는 신세대들 일본말이 잘 안 되니까 전부 그쪽으로 오는데 외교부에서 돈 많이 안 올려 준다고 만날 불평이야, 그 양반이.

하여튼 빼지 않고……

○최성 위원 이거 작성해서 나중에 보고하실 때 국제기구분담금을 빼면, 감액하고 증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시면 성격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676억을 무조건 증액시켜 준 게 아니라 국제기구……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금액이……

○최성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냐고요.

○고흥길 위원 11억이네, 그럼.

○최성 위원 11억 정도가 순증액을 했고 결국 관건은 국제기구분담금을 이번에 완전 탕감하자 이렇게 작성을, 소위 견해를 올리면 훨씬……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일단 정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꼭지 번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4번 사업으로 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이 6억 원 순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6번 사업, 국제기구분담금이 665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8번에 북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 14억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2번에 재외동포재단 우즈베키스탄 독거노인 사업 17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16번에 재외동포 임시보호지원이 14억 증액됐습니다.

그밖에 재미동포단체 청년 정치력 신장 지원 사업이 4500만 원……

○小委員長 朴鍾根 예?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4500만 원이요.

○고흥길 위원 유권자운동.

○小委員長 朴鍾根 유권자운동. 그런데 제목이 왜 그래요? 단체이름 새로 한번 불러 봐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사업 제목은 재미동포단체 정치력 신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거 무슨 단체인지, 정체불명 단체 아니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구홍 제가 좀 아는데요. 유권자로 돼서 유태인처럼 파워를 좀 갖자 그런 단체인데 아주 유명한 단체입니다.

○최성 위원 이사장은 왜 국회만 나오면 목이 쇠셔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장내 웃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구홍 아주 그런 단체는 키워야합니다. 재미교포사회가 자력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 그런 단체입니다.

○최성 위원 전략적으로 그러시는지, 중요한 얘

기만 하면 안 들려 버리니……

○이화영 위원 계속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래서 도합 682억 4300만 원이 증액이…… 죄송합니다. 감액 부분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자원 외교 아까……

○이화영 위원 에너지자원외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에너지자원외교 했잖아요? 5억 원.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리고 감액 부분에서 13번 사업, 전자여권 개발은 39억 200만 원을 삭감해서 10억 원이 책정되는 결과, 순증이 68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 위원 나중에 전체회의 보고하실 때 앞에 국제기구분담금을 빼서 일반예산 올린 것하고 전자여권 개발 해서 순증액이 얼마이고 여기에 별도로 국제기구분담금 전체 완전 탕감이 돼서 총액 얼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680억을 곳곳에 있는 것을 올려 준 것 같아 가지고, 기술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고흥길 위원 전자여권 그 부분은 단서를 해서 개발이 확정되면 추경에도 반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소위 의견으로 집어넣으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전문위원님, 아까 우리 말씀하실 때 국제교류기금, 1번 문화교류사업 이것은 증액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아닙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삭감으로 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냥 현행대로.

○小委員長 朴鍾根 재외동포재단 돈 까먹는 거 회복시켜 달라고 말씀하셨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구홍 예.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12번은 정부예산으로 재외동포재단에 출연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47억이 이번에 출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구홍 예.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뭘 까먹는다는 거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우리 교류재단에서 재외동포재단에 251억 원을 줍니다. 주로 기금에서. 251억을 주니까 기금 21억이 적자가 됩니다. 원금을 까먹게 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을 줌으로써.

그런데 왜 주느냐? 정부예산에서 그만큼 줄기 때문에……

○小委員長 朴鍾根 지금 기금 규모가 총 얼마죠?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권인혁 2750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것은 내년 가서 조정합시다. 그렇게 많은데 무슨 21억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일단 의결을 해 주시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된 내용 중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에서 이견이 없으십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없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비목을 새로 정리해서 조정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예.

○小委員長 朴鍾根 그것은 따로 정리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이규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이의가 없으시면 외교통상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국제교류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의하여 조정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 차관과 산하단체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민주평화통일자문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小委員長 朴鍾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외교통상부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보면서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정부 측의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태수 전문위원입니다.

자료는 2007년도 민주평통 소관 사업별 조정의

견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예산 중, 각목 6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내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액이 27억 4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하고 동일한 금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국내 지역협의회 예산 지출액이 국고보조 28억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원 63억, 자문위원 찬조금 25억 이래 가지고 총 116억 원으로 운영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가 63억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평통 사무처는 우리 통외통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경상성 경비, 일반사업성 경비 약 50억 정도를 증액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이따가 사무처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하시겠지만 조금 다른 감액된 증액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열린우리당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의견을 내 주셨고 그다음에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는 현 상태를 그대로,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통일정책자문회의 관련 경비입니다. 각목의 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비용은 상임위하고 분과위원회 개최 지원 예산 등입니다.

한화갑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북핵 위기와 6자회담 재개 등으로 통일정책자문위의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 예산입니다. 이것은 각목의 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내년도에 제13기 민주평통 출범 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개최 방식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국내 출범 회의를 과거 전체 자문위원을 다 모아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개최함에 따라 국내 출범 회의 경비가 한 1억 9300만 원 감소되었고 해외 출범 회의 경비도 4억 8600만 원 감소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5억 72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자문위원 수를 축소해야 된다, 자기 추천제 폐지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정부 측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우선 다른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증액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중단 결의의 근본 배경은 지난 12기 자문위원 위촉 과정상의 문제가 단초가 되었다고는 하나 통일 업무는 국가사무라는 주장 및 국가와 지방의 재원 분담의 불형평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은 총 소요된 예산 91억 중에 국가가 28억으로 30.8%, 지방정부가 63억으로 69.2%를 부담한 바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 표가 어디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표로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좀 드리시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지방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고려해서 국가의 분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의 부담비율을 최소한이나마 상승시켜 반영해 주어야만 추후 지방자치단체와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현 부담률을 60% 상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0%를 할 때는 국가가 55억, 지방이 36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27억을 제외하고 28억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예산 중 국가 부담 전환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예산 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은 국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2005년 지방자치단체 부담예산 중 통일기반조성 활동예산은 32억 규모였습니다.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부담현황을 보면 경상성 경비가 15억, 사업성 경비가 47억 해서 총 62억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이 중 사업성 경비 중 일반사업비가 약 3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률 60%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예산 중 통일기반조성 활동에 긴요한 예산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30억 규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2005년에 91억이 소요되었다 이 말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예.

○小委員長 朴鍾根 2006년에 얼마 들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2006년은 총 62억이 소요되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62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저희 예산까지 합쳐서 89억이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89억? 그리고 내년에는 계획을 얼마로 잡는 거예요?

○배기선 위원 32억 규모를 잡으면 얼마입니까? 증액 32억 해 주면.

○小委員長 朴鍾根 정부 예산에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27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가가 55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최성 위원 59억 아니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현재 32억을 했을 경우에는 59억이 되겠습니다. 28억을 부담했을 때 55억이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86억으로 가겠다 그 말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총 91억이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내년도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예.

○전문위원 허태수 다른 비용을 다 합친 것입니다. 밑에 있는 다른 행사비용까지, 국내 협의회 운영비……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2005년보다 2006년이 줄었는데 2007년은 왜 2005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최성 위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2005년도 저희 집행내역을 봤을 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일반사업비로서 32억을 부담해 줬기 때문에 32억을 이번에 총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30억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총 합해서 예산이 2005년에 91억이라면서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91억 가지고 1년 사는 것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이것은 지방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전문위원 허태수 민주평통 전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총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총예산은 127억 규모이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127억, 2005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2006년에는 얼마였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127억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2006년도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똑같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똑같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2007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2007년에는 128억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이렇게 가는데 정부하고 지방비하고 부담비율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규모는 비슷하게 간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예.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 이야기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금년에 30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전문위원 허태수 내년도 예산을 158억 정도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년도에 왜 올라가야 되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아까 제가 사유를……

○小委員長 朴鍾根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안 대 주니까 국고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127억 규모로 가던 사업비 자체를 갑자기

150억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지금 128억 예산 중에 저희 지역협의회를 지원하는 예산은 28억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28억 규모가……

○小委員長 朴鍾根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체 규모가……

○최성 위원 과거에 지방에서 지원받은 것이 얼마예요? 63억이었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63억 정도입니다.

○최성 위원 63억이 그러니까 국고지원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그렇습니다.

○최성 위원 이것이 안 되니까, 63억이 다 플러스가 되어야 예년 수준인데 그것이 안 되어서 현재는 30억만 추가를 시켜주라는 것 아니에요. 크게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허태수 옛날에 지방에서 보조받는 돈은 민주평통 예산으로 안 잡혔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국가예산규모입니까, 127억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지방에서 쓴 돈이 얼마인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63억입니다.

○배기선 위원 그러면 190억이네요.

○최성 위원 그렇지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2005년이 190억이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2006년에서는 얼마 쓰셨느냐고, 지방비까지 합하면.

○전문위원 허태수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똑같다, 그러면 내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내년에는 좀 줄어 들어 가지고 15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30억이 줄어들어 가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예, 그렇습니다.

○최성 위원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DJ정부 때 청와대에서 평통도 한 파트로 담당했는데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나라당 의원님들 상황까지 감안해서 보면 이번 평통 인선 과정에서 불만들이 많고 문제제기도 되고 또 지자체에서 예산은 없는데 평통에다가 지원하니까 결의를 해서 안 하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권하고 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것을 완전 삭감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제가 옛날에 제안했던 수정안대로 하면 평통이 없는 예산 가지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마음에 드는 위원회 몇 군데에다가 얼마 안 되는 돈을 나눠 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사업비 중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평통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데 대체로 지역의 평통협의회들을 보면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야성이 강한 지역이 있고 또 여성이 강한 데도 있고 협의회마다 이 편차들이 6 대 4냐, 5 대 5냐, 7 대 3이냐는 모르지만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상당부분 저는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년처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평통에서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이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최종 예결위에서 이것이 통과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불투명해요.

그래서 지금 평통에서 말한 이 예산 부분들은 다음 임용 과정에서 철저히 중립성을 유지하라, 그리고 평통 활동에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 메칭 펀드식으로 지역협의회가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라 이렇게 단서를 해 주고 이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 주어도, 그러면 넉넉하게 평통협의회가 활동하느냐 하면 사실은 최소 운영비를 지역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고 자치단체도 원래 요구했던 요구를 수용하는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정부예산에 반영한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정부예산에 반영해 준 것이 128억 규모로 올렸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128억, 그러면 정부는 설득을 못 시키고 왜 국회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전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금년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반영이 되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최성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푸시려고 해요? 이번에는 아무튼 나중에 위원장님이랑 저기하겠지만 지자체 예산 추가로 예산지원을 안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법개정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대충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 허태수 일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예, 일부만 받도록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그런 방향성을 갖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알겠으니까 이것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맙시다. 왜 그런고 하니까 한나라당 입장에서 올릴 수도 없고 또 지자체하고 앞으로 협상 여지도 남아있는데 미리 주어 놓으면 지자체가 아이고 잘됐다고 하고 줄 것도 안 준다고.

그리고 우리 동네도 평통에 누가 있는지 나도 환하게 다 알고 있는데 만날 먹고 놀지 통일교육은 무슨 놈의 통일교육이야.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입니다. 뜻은 고상하지만 사실상 자문위원들이 통일을 위해서 발벗고 있는 사람이 몇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나름대로 판단해 놓은 데 그대로 따라갑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국회 차원에서 손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물론 어려우신 점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죽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小委員長 朴鍾根 앞으로 활성화 시켜 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그분들의 이야기가 국가와 지방의 부담률이 너무 불균형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3 대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는 맞춰 줘야 자기들도 힘이 나서 도울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꼭 그것을 관철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배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금비율을 맞춰서 올려 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오케이합니까? 그 얘기는 되어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물론 당연히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처음부터 올려 가지고 오지. 정치적으로 또는 정부 판단이 잘못되었고 해서 국회가 보완하는 것이지 정부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왜 국회가 그것을 억지로 올려 주어야 돼.

○최성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전에 제가 전체회의 때 사실은 어떤 주장까지 했느냐 하면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 계속 평통의 중립성 문제가 문제제기되면서, 이를테면 정부가 이 예산을 가지고 통제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아예 평통 지역협의회도 지원해 주지 말고 자생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데 현실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평통 부분의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지역협의회에서도 새로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당성을 떠나 가지고 아니, 국회에서……

○배기선 위원 평통이 헌법기관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예.

○배기선 위원 헌법기관인데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최성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확보시켜 주면 끝까지 보장이 되는, 하나의 어려운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배기선 위원 위원장님 32억만 해 줍시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정부가 안 올려 줘도 욕 얻어먹고 올려 줘도 욕 얻어먹는구먼. 그러니까 정부원안대로 하고 말자고.

○최성 위원 위원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단계가 전체회의도 있고 예결위 가서도 아마 똑같은 심도 높은 논의는 있을 거예요. 한나라당에서도 또 다양한 자치단체 견해도 들으시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30억을 깎아 오셨는데 10억 정도는, 평통에서 하는 예산 중에서도 지역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20억 정도를 일단 소위에서 증액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했던 단서를 임용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중립성 보장과 활동에 있어서 매칭펀드라든가 자생력 강화를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전체회의하고

예결위에서 마지막 싸울 수는 기회를 주지요.

○小委員長 朴鍾根 나는 이것 동의할 수 없어.

○고흥길 위원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니까 위원장도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최성 위원 한나라당 공식 입장이 이것의 완전 전액 삭감입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아니야.

○최성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올려 주지 말아라 이거야. 정부안대로 그냥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손대지 말아야 돼.

○최성 위원 일체 증액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라당……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정부에서 정한 것도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최성 위원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사실은.

○고흥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지역협의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은 성향이 친여성이고 어느 지역은 친야로 그렇게 되어서 일률적으로 했을 때에는 한나라당이 반대해 가지고 그것 일차 안 해 주기로 했다 하게 되면 사실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지요.

○최성 위원 부담도 있지요.

○小委員長 朴鍾根 한나라당이 뭘 반대했는데?

○고흥길 위원 증액.

○최성 위원 증액을 모두가 다……

○小委員長 朴鍾根 정부가 안 해 준 것을 왜 한나라당 탓을, 증액해 주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최성 위원 그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봐도……

○小委員長 朴鍾根 정부가 해 놓은 것을 우리가 깎으면 욕을 얻어먹지만……

○고흥길 위원 지자체에서 여태까지 해 주었는데 60억 정도 그것을 안 해 준다 이거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이 주로 한나라당이 잡고 있다 이거야.

○최성 위원 그럼요.

○고흥길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게 전액 예산을 주지도 않고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증액을 안 시켜 주고 하면 평통이라는 조직은 한나라당하고는 이렇게 되는 조직인데……

○小委員長 朴鍾根 왜 한나라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배기선 위원 아니, 괜히 남들은 다 해 주려고 그랬는데 위원장이 또 안 해 주었다고 괜히……

○小委員長 朴鍾根 위원장이 안 해 주었다고 해도 돼. 나는 죽으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배기선 위원 그러니까 63억 중에 절반만 해 줍시다. 절반 딱 깎아 가지고 30억만 해.

○小委員長 朴鍾根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하고, 외유성 출장 같은 것 줄이고 교육이나 단단히 시키고 그렇게 좀 축소……

○최성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실제로 이게 30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이것을 저희들이 올려줘서 전체 회의 통과해서 예결위에 가도 이게 얼마 수준으로 예산이 깎여질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예결위에 가서 올려.

○최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를테면 확실하게 이것을 아예 딱 정리해 버리시면 사실 또 저희 여당 위원들……

○小委員長 朴鍾根 전 자치단체장이 반대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요?

○최성 위원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것은 오해신데, 자신들의 지원금을 내겠다는 것이 반대지 현재의 평통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까지를 하지 마라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거야 그것이 맞지.

○최성 위원 그런데 당장……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정부에서……

○최성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 보세요. 제가 지금 자꾸 한나라당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한나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평통이나 또는 지역적으로 영남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한나라당 성향이 강한 쪽은 여전히 한나라당 지지 성향이 많은 평통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이나 한나라당에게 '야, 이것은 도대체 예산도 지원도 안 해 주고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급하면 또 내겠지, 뭐.

○고흥길 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또 자치단체장 전체 결의에서 안 해 주기로 했으니까 임의로 어

느 한 친구가 하기도 좀 어렵기는 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체 회의 때 왜 정부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을 해결하지를 못 하느냐?

○배기선 위원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명색이……

○고흥길 위원 성격은 아니지만 대책은 세워야 되니까……

○배기선 위원 이것은 대통령령이 의장이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예, 그렇습니다.

○배기선 위원 또 평화통일 이게 정말 우리 전국민의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비전이고 민족적인 염원이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기본적인 지역협의회의 운영예산이 자치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해서 확보가 안 되면 정부라도 당연히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기획예산처가 이래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줘야 되는데……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해결하라니까.

○최성 위원 예결위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小委員長 朴鍾根 기획예산처에서 다 심사도 하고 그런 것 다 알고도 이렇게 정했는데 외통위가 왜 나서?

예결위에 가서 해결하라고. 정부 원안대로 그냥 갑시다.

예결위에서도 할 일이 있어야지 예결위에 가서 좀 이야기를……

○고흥길 위원 예결위에서 순증을 상임위원회에서 안 한 것을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小委員長 朴鍾根 그때 또 온다고. 예결위에서 오면 해 주자고.

○배기선 위원 아니,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우리가 올려봤자 예결위에서 깎아버리면 그만인데 이것은 센시티브한 문제니까 전쟁을 두 군데 세 군데 벌리지 말고 한 군데서 전쟁을 치르고 끝내자 이 말이에요.

내 말 안 맞는가요? 예결위에서 관철 못 시키면 우리가 올려놓아도 소용이 없다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예, 예결위 관철을 꼭……

○배기선 위원 예결위 관철 대책은 다 되어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예.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관철 대책이 있거든 거기 가서 올리라니까. 올려온 데에 대해서는 동의 다 해 줄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지금 대다수의 자치단체장들이……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최 위원, 내 말에 뭐 틀린 것이 있는 것이요?

○최성 위원 그런데 예산통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더 불가능하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자치단체장들이 중앙에서의 증액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小委員長 朴鍾根 왜 예결위에서 올려오면 통과시킨다는데. 대책 다 세워놓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최성 위원 어떠세요, 30억을 20억 원으로 하는 경우는 어떠세요?

○小委員長 朴鍾根 원안대로 통과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하여튼 상징적이나마 이 예산을 증액해 주셔야만 자치단체장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최성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바로 액수 증액이 아니고요. 단서조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지원했던 63억을 정부는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원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평통에서는 63억에 이 지자체를 국고로 보조해 주라고 했으나 기존의 충원과정에서의 인선의 중립성 보장 문제, 또 활동에 있어서의 중립적인 활동, 그리고 향후 지역협의회 활동에 있어서의 예산상의 자립화를 담보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30억이 안 되면 20억을 예산상에 증액해 준다. 그리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강구하라고 소위 우리가 단서조항으로 올리면 전체 회의에서 사실 또 한번 논란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결위에 가면 마지막……

제가 볼 때에는 한나라당 자치단체장 출신들하고 정책위에서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정리해 놓으셔 버리면 나중에 한나라당 자치단체

장 출신들도 사실은 지역에 있는 협의회 분들한테……

이제 우리는 활동이 중단되게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아마 논란이 상당히 일어날 것입니다. 정책질의에서 계수조정소위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서 전쟁 치러 가지고 오면 이기든가 지든가 끝내 버리고 말아야지 전쟁을 두 군데 세 군데 벌리지 말자 이 말이야.

내가 예결위에서 오케이 하면 우리 동의해 주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니까. 거기에서 전쟁을 잘 치러 가지고 오소. 그러면 우리가 다 해 줄게.

○최성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저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저도 그래 가지고……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 단서 붙이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산서에 단서 붙는 조항도 없고, 그것은 그냥 보고할 때나 그렇고.

○최성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小委員長 朴鍾根 통일부로 빨리 넘어가자고, 그만.

○최성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만약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증액을 안 하면 실제로 지역 평통 활동이 마비될 것이에요, 제가 봐도.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헌법기관이고, 또 그랬을 때 그 부담어린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사실은 소위가 많은 권한을 위임 받기는 했지만, 완전히 그 부분들을 그냥……

○小委員長 朴鍾根 고흥길 위원은 좀 올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흥길 위원 여기서 딱 완전히 잘라 버릴 때에는 조금……

○小委員長 朴鍾根 우리가 뭘 자르는데? 우리가 자르는 것 하나도 없어.

○고흥길 위원 아니,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도 붙이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증액해 주자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10억만 해 주십시다, 10억만. 명목만 붙여 놔.

○최성 위원 한 20억 원 해 주시고 또……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명목만 붙여 놓아 가지고 예산처 가 가지고 더 늘리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라니까. 10억만 올립시다.

○배기선 위원 30억 써요, 그냥. 이왕에, 위원장님.

○小委員長 朴鍾根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니까. 예결위에서 또 붙는다니까, 붙게 되어 있다고.

○최성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서의 10억하고 20억은 다른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10억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20억인 경우는 실제 아까와 같은 그런 경우들이 담보되면 운영이 가능한 액수인데 10억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이것 해서 나누기 지역협의회를 해 버리면 설득력이 없으니까요.

○小委員長 朴鍾根 나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안 하고 돈을 못 내겠다고 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위원장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선 위원 활동을 못하는 것이지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에서는 다 아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조금 정치성을 띤 싸움을 해 가지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결위에서 해결을 시키자니까.

○최성 위원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20억 증액을……

○小委員長 朴鍾根 정 그러면 우리가 명목만 세워줄게.

○최성 위원 이 20억 규모를 저도 냉정히 개인적으로 반드시 삭감이냐 증액이냐 이런 입장은 아닌데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소위가 권한을 받기는 했지만 대단히 미미합니다. 사실 네 분밖에 안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예결위에 가기 전에 이 안이 전체 회의에 올라가면 그때 평통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분이 판단할 준거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정도를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여지는 주어야 되는데……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10억만 올려줄게요. 10억만 올려.

○최성 위원 그래서 아까 20억으로……

○**小委員長 朴鍾根** 저쪽에서 30억을 제안했는데……

○**고흥길 위원** 그러면 15억으로 해서 합시다. 그리고 사무처장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예결위에서 해 가지고……

○**小委員長 朴鍾根** 예결위에서 승부를 내라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고흥길 위원** 사실 15억을 하는 것도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시는 것이에요.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 다 깎는 것이니까……

○**배기선 위원** 명색이 헌법기관의 지방협의회가 60억 몇 억씩 지원 받아 가지고 움직이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게 하나마나지 뭐……

○**최성 위원** 그런데 이게 나누어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고흥길 위원** 그래요, 글쎄 껌 값도 안 되는 규모인데……

○**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하는 결정이면 우리가……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해? 기획예산처 뭐했어, 그래? 정부가 이 정도면 되겠다 결정해서 가지고 온 것을……

○**최성 위원** 위원장님, 한나라당에서 중요시하는 법 저희들이 또 좀 배려해 드리고 이것도 여당으로서 저희 당 입장도 있으니까 20억으로 해 주시지요?

○**배기선 위원** 20억으로 해요.

○**小委員長 朴鍾根** 자꾸 그렇게 하지 마소. 내가 지금 마음이 좋아서 자꾸 양보하는데 그것은 안 돼요.

○**고흥길 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 조금만 해 놓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어차피 증액해 주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정말 대행 기관장들한테도, 자치단체장들한테도 체면 서게끔 조금만 더 증액해 주십시오.

○**최성 위원** 20억 해 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망을 안 시킬 테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小委員長 朴鍾根**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최성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20억으로 해 주세요.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정부에서 안 해 온 것을 왜 국회에 와 가지고 해 달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뭣인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국회에서는 이것 고쳐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충분한 명분이 있을 때 국회가 하는데……

○**최성 위원** 이게 20억으로 증액되어서 실제로 부족하나마 협의회가 활동이 되면 제일 또 반가워할 데들이 자치단체들이에요. 자기들이 예산은 증액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활동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이 한나라당 출신들이 많아요, 실제로.

○**배기선 위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체면 세운 것 아니요! 우리는 전액 삭감인데 여당이 워낙 그렇게 하니까 반이라도 올려 주었으면 우리 체면은 끝난 것이에요. 그다음에는 예결위에 가서……

○**고흥길 위원** 두 분 여당 위원님들께서 나서서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증액을……

○**배기선 위원** 두 사람 10억씩 해서 20억 해 줘요. 아이고, 그래 5억 더 깎아서 뭐 하실 거예요? 이왕에 해 주는 것 20억 해 줘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둘이 5억씩 해서 10억 만들어 줍시다.

○**최성 위원** 위원장님, 20억이면 평통 끝납니다.

○**배기선 위원** 끝냅시다. 가야 돼,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오늘 또……

○**小委員長 朴鍾根** 통일부는 안 할 것이요?

○**배기선 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자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밥 먹고 천천히 합시다. 밤 새워 하는 데, 내가 예결위에서 밤샘 많이 세웠다. 밤 새우는 데 내가 전문이다.

○**배기선 위원** 방망이 두드려 주세요.

○**小委員長 朴鍾根** 내가 맥시멈으로 한 것입니다, 50% 반영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성품도 봐줘야지, 당에서 반대하고……

○**고흥길 위원** 당에서 반대하고 또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한나라당 의원들은.

○**小委員長 朴鍾根** 전부 반대했는데……

○**배기선 위원** 반대한 취지는 뭐냐 하면 운영을 제대로 해라, 중립적으로 해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뻔한 것이고, 운영이 잘 되리라고는……

○배기선 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게 명색이 헌법기관이고……

○小委員長 朴鍾根 헌법기관을 왜 기획예산처에서 이렇게 괄시하는데?

○배기선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최성 위원 30억도 평통에서는 나름대로 최소한 이 정도는 됐으면 하는 안이니까요. 원래의 안에 비추어보면 대폭, 이것은 지자체 부분이니까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0억을 깎아서 10억만 하고 의견서를 다세요. 열린우리당에서는 20억을 증액시키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성 위원 왜 다시 더 깎아 버리십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소위 위원장이 하도 반대를 해서 10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20억으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최성 위원 고흥길 위원님도…… 아니 20억 증액 주장이 아니라 여기서 거기까지는 올려주자는데 동의하시는 분위기이잖아요. 그러면 소위원장님이 전체 의견을 수렴하신다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小委員長 朴鍾根 보세요. 이것을 해 줘 가지고 예결위에서 별 논란이 없이 통과되기만 하면 나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1라운드 또 붙어 가지고 우리가 올려놓은 것도 깎자고 할 것이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이것밖에 안 올렸느냐, 안 된다, 30억 올려야 된다고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붙는다니까, 그래서 그쪽에 맡겨놓자니까요. 우리는 15억을 해 놓았으니까 반만 해 줘도 해 준 것 아니요. 반타작했으면 잘한 것이지 뭘 그래……

○배기선 위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조그마한 뭐 하나 짓는데도 17억 지원하고 그러는데……

○최성 위원 전국에 협의회가 몇 개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232개입니다.

○배기선 위원 지역협의회가 이백몇십 개 되고 1만 7000명이 되는 이런 기관의 운영예산을 지원하면서 15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하려면 아예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낫지……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읍시다.

○배기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小委員長 朴鍾根 이게 예결위에 가서 크게 논란이 안 붙을 일이면 우리가 조율을 해서 이대로 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나도 체면이 있지, 우리가 올리거나 깎은 것을 예결위에서 크게 손 안 대고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지 예결위에서 난도질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정치성이 들어 있는, 논쟁이 붙을 사항 아닙니까?

○최성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의 요지는요. 그 취지는 충분히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한나라당 위원님의 탈북자 재외동포법, 중국의 탈북자 문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반대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내가 위원장인데 모든 걸 책임진다 저는 그거보다는 사안별로……

○배기선 위원 위원장님은 절대 반대했는데 열린우리당 때문에 할 수 없이 3분의 1만 했다 이렇게……

○최성 위원 여당 위원들이 해서, 그 부분이 60억인데……

○小委員長 朴鍾根 50% 양보했으면 양보를 적당히 했지, 나 보고 전부 다 뒤집어쓰라는 소리요?

○최성 위원 그렇게 안 해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니까요.

○小委員長 朴鍾根 15억 이상은 안 돼……

○고흥길 위원 위원장으로서도 사실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전액, 사실은 문제가 있는……

○小委員長 朴鍾根 당에서 지금 다 깎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

○배기선 위원 평통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小委員長 朴鍾根 평통을 없애고 말고 그것은 뭐……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정도면 된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 간의 논쟁으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것인데, 우리가 체면치레만 하고 예결위로 넘기자니까요.

○최성 위원 아니 그 맥락 때문에 제가 20억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小委員長 朴鍾根 그 맥락이라니?

○최성 위원 아니 더……

○小委員長 朴鍾根 20억을 올려놓으면 오히려 예결위의 한나라당이 더 반발합니다. 다 깎으라

고 했더니 다 해 줬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고흥길 위원 예결위에서의 지금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여당 입장을 생각해서 반을 반영해 놓았으니까 깎든지 말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넘기자니까요.

○최성 위원 그게 반이 아니지요. 원래 지금 이것은……

○배기선 위원 63억의 반은 31억이지요.

○최성 위원 그런 것이지요. 왜냐하면 평통이, 제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小委員長 朴鍾根 최 위원, 양보하세요. 자꾸……

○최성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평통에다가도 제가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비공개적으로 오늘 여기에 나올 때 괜히 이상론을 가지고 와서 그러지 말고……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표결합시다, 2 대 2로.

○배기선 위원 소위원장은 하시지 말고 세 사람, 우리끼리 합시다.

○小委員長 朴鍾根 2 대 2로 표결하면 부결이니까 표결하든가……

○최성 위원 아니요, 이화영 위원님 금방 올라와 버려요, 예결위장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오라고 그래요.

○최성 위원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안을 가져오라고 제가 사실 많이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저희들이 깎은 것이고……

○小委員長 朴鍾根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아무리 한나라당이 다 잡고 있다고 그래도 지방 평통위원들이 압력을 넣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도 여당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라, 내라 하면 조금씩 들어간다니까요. 한 번도 안 넣고 입 싹 닦고 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디에 있나요. 15억으로 일단 하고 빨리 저녁 먹고 통일부로 넘어갑시다.

○고흥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小委員長 朴鍾根 예결에서 올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고흥길 위원 사실 5억은 늘리고 줄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30억을 다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배기선 위원 그래서 20억을…… 저는 3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최 위원님이……

○小委員長 朴鍾根 나한테 명목을 달라 이거야, 하도 여당에서 주장하니까 반만 반영해 놓았으니 다 깎든가 다 해 주든가 알아서 해라, 나는 그렇게 하고 빠질……

○최성 위원 어떠세요, 15억으로 해 놓고 나중에 하는 부분?

○小委員長 朴鍾根 예결위에 가서 해결할 대책 다 세워 놓았다면서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알겠습니다.

○최성 위원 평통에서 수용했으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15억으로 합시다.

○최성 위원 대신 평통에서 제일 신경 쓸게 내가 볼 때 위원장님이 사실 아까 많은 함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치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으니까 이 15억 증액에 대해서 전체회의에 올 때 설명을 잘하셔서 우선은 전체회의 통과가 관건이고 또 예결위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나중에 이게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선심성 예산이 되고 나중에는 실질적인 마비가 되니까 그것을 잘 유념하세요.

○小委員長 朴鍾根 예결위에 가서 15억 지키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심의를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감 조정 또는 증액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태수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활동지원비를 15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좋습니다.

지금 정리된 내용 중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민주평통에서 의견 없으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오세정 예.

○小委員長 朴鍾根 이의가 없으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의에서 수정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小委員長 朴鍾根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일부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서 심사한 방법과 같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신언상 차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보면서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태수 사업별 조정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일정책추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포언론사 통일정책홍보비, 재외동포문화 행사지원 등에 관한 것으로 배기선 위원님께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여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시다면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화갑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1번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족화해센터 건립예산입니다. 천주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5억이 반영되어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야 되고 정부의 동의를 받고서 증액해야 됩니다.

네 번째,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지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인데 정의용 위원, 박희태 위원님께서 새터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하나원 본원 증축 예산인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현재 설계비 14억 5000만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 공사를 내년도에 끝내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공사비 포함해 가지고 요구를 했으나 삭감돼 가지고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 예산입니다. 이것은 김무성 위원께서 서면으로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개성공단물산전 개최예산입니다. 이것도 김무성 위원께서 서면으로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개성공단 법제구축 예산인데 이것은 개성공단 내에 적용할 법규개발 용역비 등입니다. 이 문제도 김무성 위원께서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 개성공단 RFID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출입차량에 RFID 시스템 태그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김무성 위원께서 서면으로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일교육지원입니다. 통일교육원에 있는 예산입니다만 배기선 위원께서 통일교육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예산입니다. 통일교육원 예산인데 김무성 위원께서 서면으로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보분석관리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한화갑 위원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또 한화갑 위원께서 정책연구개발은 정책연구용역사업이라는 목적에 맞게 통일부의 업무능력 범위를 넘는 전문화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출연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650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이해봉 위원님께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등 현 상황을 고려할 때에 기금출연금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최성 위원님 등께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 여부 등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07년도 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에 대한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적왕래지원사업은 6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김무성 위원께서 금강산관광지원사업 30억 5000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도적지원사업인데 주로 비료를 지원하거나 영유아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김원웅 위원장님 등 열린우리당 위원들께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세 번째, 남북경제교류협력지원 예산인데 세부내역은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예를 들면 개성공단 내의 병원, 그린닥터스

자원봉사자 숙소, 북측 근로자의 탁아소 및 숙소 건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권영길 위원, 배기선 위원께서 증액을 요청하셨고 진영 위원, 김무성 위원께서 대북송전 사업비용 150억 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차관 신언상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최성 위원님, 이화영 위원님, 배기선 위원님, 고흥길 위원님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일반회계 부분은 1064억입니다. 이 중에서 기본경비 빼고 사업비가 681억인데 그 중에서도 새터민관련 예산 504억을 제하면 일반사업비가 28% 정도인 178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마는 증액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워낙 덩어리가 작아서 어딜 봐도 삭감을 해야 할 내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고흥길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민족화해센터 건립사업의 5억 증액은 저희 의견은 총량규모제 방식이니까 별도로 5억을 플러스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5억이 아니라 50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임종석 장관 때부터 약속이 돼 있던 사업인데 기획예산처 실무진에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140억인데 내년에 공사가 끝나는데 현재 5억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자체에서 70억 준비하고 정부에서 50억 다음에 경기도에서 4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증액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0억을 소위원회에서 올리면 예결위에서 한 30억 정도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좋습니다. 그냥 저희 예산에다 별도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허태수 민족화해센터 건립이라는 비목이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있으니까 그 비목을 새로 만들어서 50억을 올리는 것으로……

○고흥길 위원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이 있을 때 오케이가 다 됐던 사안인데 이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가고 장관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지난 4월에 통일동산에서 기공식을 가졌는데 그때 정진석 추기경이 오셨고 김문수 당선내정자, 손학규 지사 이 사람들이 다 왔었고 이종석 통일부장관님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고 합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통일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도 반영을 못하고 그냥 삭감이 돼 버렸어요.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흥길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예.

○고흥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부족한 게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더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여야가 거의 합의를 한 사항이고 제가 말했듯이 임종석 위원, 문희상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강래 예결위원장까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통일부차관 신언상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증액해서 예결위에 고 위원님께서 잘……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예결위의 수석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최성 위원님.

○최성 위원 통일정책추진 지원에 대해서 배기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특히 민화협 같은 경우는 초당적인 국민화합형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갖고 참여하는 형태니까 제 생각으로는 증액은 아니더라도 전년도 예산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흥길 위원 저도 찬성입니다.

○최성 위원 그리고 민족화해센터 건립에는 고흥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음에 새터민교육훈련 및 정착지원하고 하나원 본원 증축은 기예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분적인 예산의 감소나 삭감이 있겠지만 북한 인권과 관련한 유엔 결의안도 통과됐고 또 우리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요구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정부가 내세웠던 부분이 새터민 문제나 이탈주민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4%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새터민 교육훈련 정착지원도 최소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하나원 본원 증축은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통일부가 요구하는 금액이 1350억입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13억 5000만 원입니다.

○최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설계비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저희는 건축비까지 요청을 했는데 예산처에서……

○최성 위원 그러니까 통일부가 제일 이상적으로 원하는 안은 하나원 본원 증축이 얼마까지냐는 거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원 본원 증축을 반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국제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야당도 아마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안은 요구할 것이니까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통외통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최대한의 예산을 해야지요. 그랬을 때 설계비 외에 내년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인가요?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이충원 설계비 포함해서 58억입니다.

○전문위원 허태수 45억을 증액시키면 됩니다.

○최성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일미래지도자 과정은 최재천 위원, 김무성 위원이 제기한 것이지만 이것은 전액 삭감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통일부가 벌여 놓은 일들도 감당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 대학에서 다들 잘하고 있으니까 통일부가 미래지도자 과정까지 해 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출연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감액을 요청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들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미국의 부시 행정부도 6자회담 재개에 합의를 했고 6자회담 재개 선언이 이루어지면 결국 9·19공동선언의 이행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거기에 대북 송전 문제를 포함해서 각종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논의가 되겠기 때문에 이 협력기금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없을 경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북핵 폐기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심화시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한미 공동으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 핵 폐기와 통합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상징적으로 이 협력기금을 증액은 시키지 않더라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감액과 관련된 부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을 붙이지 않고 일단 현재의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 신언상 최 위원님 말씀에 제 의견을 하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최성 위원 예, 하세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3페이지, 일반회계 11번입니다. 통일미래지도자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신규로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지금 졸업생이 곧 나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년차에 들어가는데 왜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년에 개소식을 하기 전, 작년에 예산처가 다른 부 절차가 모두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 사업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개학을 하게 된 셈입니다. 자체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그래서 교육원이 1년 동안 이 돈 때문에 말도 못 하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2차 연도인데,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급 공무원하고 공사, 국영기업체 간부 해서 한 30명이 1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류의 사업이 통일부에 두 가지 있습니다.

통일기획요원하고 통일미래지도자 과정인데 통일기획요원은 공무원으로 매년 15명이고 이게 95년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통일기획요원은 3개월짜리인데 그것은 북한에 어떤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각 부처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취지에서 문민정부 때 생긴 것이고 통일미래지도자 과정이라는 것은 남북 화해협력이 진전되면서 당국 간 접촉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도 점차 활성화되고 늘어나니까 민관이 뭔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입각하여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균형적으로 대북사업에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 점차 단계적으로 화해협력이 진행되니까……

○최성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주축이……

○통일부차관 신언상 이 사람들이 아침 9시까지 통일교육원에 와 가지고 오후까지 매일 해서 1년에 44주, 11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최성 위원 파견을 다 해 가지고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공무원도 있고 공사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대학원 1년짜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졸업생이 곧 나오고 내년도 신입생 뽑을 것을 각 부처하고 공사에다가 공문까지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배기선 위원 저는 대체토론에서 얘기했지만 하여튼 핵 문제 때문에 통일부 예산 또는 남북경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응징 차원, 제재 차원에서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오히려 통일부 예산은 남북대화를 다시 복원시키고 6자회담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상징적으로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대화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이나 이런 것을 축소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사국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오히려 통일부 예산이 좀 제대로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회계 중에 이거 170 몇 억이면 조그만 중소기업만도 못한 예산을 가지고 통일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명색이 지금 핵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 어쩌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서울 상공에 530조의 돈이 떠도는 나라에서 통일부 예산이 일반회계…… 이게 백몇십 억이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전체가 1064억인데 기본경비 빼고 사업비가 681억입니다. 이 중에서 새터민 관련된 것이 504억이고 일반사업비는 178억밖에 안 됩니다.

○배기선 위원 그러니까 178억 가지고 뭔가 비전을 가진 통일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말로만 통일사업이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통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증액 의견에 전반적으로 다 찬성을 하고요.

민족화해센터 건립 50억, 이것은 정부에서 삭감해 가지고 왔는데 고흥길 위원님이나 임종석 위원 의견처럼 이것도…… 더군다나 이것은 천주교에서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을 증액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사업은 지금 현 상황에서 그나마 상징적인 사업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인들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주목하고 있는, 유엔에서조차 이 사업들은 존중해 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부 원안에서 일부 개인사업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하고 가능하면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화영 위원 배기선 위원님 말씀과 같은 기조이고요. 지금 대개 북한 핵 위기 이후에 분위기가 좀 냉랭해졌지만 아마도 위기가 기회가 되는 내년도에는 통일부의 남북협력사업이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 하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기선 위원님 말씀처럼 대략 증액될 부분들은 증액이 되고,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나온 게 어디 있습니까?

○최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한 부분에서 추가로……

○小委員長 朴鍾根 예, 말씀하세요.

○최성 위원 미래지도자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전액 삭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필요할 것 같네요. 중앙부처에 있는 아까 말했던 과장급, 지자체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과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면 이게 다 무산되니까 그대로 유지는 하는데요.

여기 교과목을 보니까 '남북한 통일정책', '북한정치 이해', '사회주의권 체제변화 사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하나도 필요 없고 실질적인 것을 배워야지요. 부처에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과목을 공부해 가지고 박사논문 딸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각종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 또 이런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협상에 임했을 때 남북대화나 각급 실무적인 회담들을 하면 이제는 각 부문별 회담들을 많이 하잖

아요. 그래서 회담 일꾼들을 키워주는 쪽으로 해야지, 이것은 앉아서 책 한 권 읽으면 다 되는 내용이니까 교과목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전환을 하시고요. 아까 제가 예산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번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원장 김홍재 과목을 이렇게 학과목식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포함이 됩니다.

○배기선 위원 그리고 아까 기본만 그대로 가자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예.

○배기선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거기에 소속해서 2년째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존경하는 김덕룡 위원님도 거기에 참여하시고 그 외에 민주당, 민노당이 다 참여해서 각 당의 지도자들이 전부 참여하는, 참으로 범국민적인 민족화해협력 통일사업을 하는 단체인데요.

지금 이 단체가 적어도 민간협력 사업의 아주 중추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는 사업의 내용도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하지만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실제로 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꽤 많은 인력들이 북한의 공적인 기관과 대응해서 통일사업의 논리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비해 지금 지원금이 계속 2003년도에 4억 5000 지원하다가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해서 3억 5000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단체의 규모가 거의 모든 종교단체, 거의 모든 정당 그다음에 이백여 개 이상의 전국, 이렇게 큰 민간 통일단체의 지원금치고는 너무 액수가 적어서 저는 대폭 많이 늘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2003년 수준으로 1억이라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어렵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통일교육협의회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염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민화협 지원금을 한 4억 5000으로 1억만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고흥길 위원 민화협 좋아요.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정책추진 지원이라든가 통일정책이라든가 뭐 증액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통일정책추진 지원에 9700만 원을 더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춘다거나 이렇게 지금 다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큰 사업 자체의 존속이라든가 계속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환원시켜 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9700만 원이 큰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부 작년 수준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예결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순 증액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증액을 해야지 작년 수준으로 다 해 놓고 증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대개 그 사업을 명맥을 유지하는데 또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처의 의견을 존중을 해 줘 가지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다 거쳐서 확정된 예산인데 그 조그만 액수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증액이다 하는 이런 비판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지원에 작년보다 19억 4500이 감소가 됐는데 새터민 훈련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은 20억을 증액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증액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렇고, 하나원 증축 같은 것도 이게 내년에 설계비가 13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렇습니다.

○고흥길 위원 그래서 건축비가 내년에 이거다 하는데 하나원 본원 증축이지 사실상 하나원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증축입니다.

○고흥길 위원 북한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사실 이게 예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선 신규사업으로 설계비를 집어넣었는데 여기다 우리가 다시 또 내년도 건축비까지 추가로 해 놓는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

들어가고 실사설계 들어가고 하면 1년 동안에 설계 제대로 할래도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냥 건설비를 더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사업지원사업단 운영, 김무성 위원이 주장을 하셨지만 개성공단사업이 사실상 해체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것을 완전히 전액 삭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이 해체가 안 되는데 운영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물산전 이게 계속 하는 겁니까? 금년에 한번 하고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예, 물산전은 국내외 박람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판로개척 내지 홍보 차원에서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엑스에서 무역전시회 열리면……

○고흥길 위원 지난번에 했지요?

○전문위원 허태수 예,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고흥길 위원 이것도 사실 규모를 꼭 이렇게 작년 수준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삭감하는 수준에서 하고요.

개성공단 법제구축 같은 것은, 그런데 법제 구축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법제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고경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지역은 북한에 있지만 북한의 일반법이 적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상 법률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공백상태인데 북한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 지역의 법규는 남북이 합의로 하나씩 만들어 가기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기업창설, 등록이라든가 부동산 규정, 노동 규정, 환경 규정 등등 해서 한 40개를 만들었습니다. 심천이 중국의 최초의 특구인데 심천에서는 20년 동안에 약 4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400개 법규가 중국 개방이 내륙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법제를 바꾸는 모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 내부에서 전례도 없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조기에 마쳐야 개성공단의 법적 인프라가 갖춰지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가 됩니다.

○고흥길 위원 그러니까 연구해서 법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니까 이것은 필요하겠고요. 이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냥 존속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개성공단 RFID시스템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니까 그것은 한다 그러고요.

통일교육지원 배기선 위원님이 이걸 하셨는데 이것도 1억 3000만 원, 특별히 15억 하는데 이렇게 다시 또 증액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히 삭감을 하고요.

미래지도자 그냥 놔 두시고, 한화갑 위원님이 2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이것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렇게 뭐 인심 쓰는 식의 이런 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본질상 별로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연구개발도 그냥 삭제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남는 게 남북협력기금 출연 6500억인데 사실 본 위원은 협력기금 출연을, 지금 남북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고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열린우리당 위원님들이 저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예산상 수치로 읽을 수 있는 남북관계의 변화 같은 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라도 저희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뭐 금년에 조금 줄이면 내년에 다시 필요한 대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 규모까지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뜻에서 옳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지금 인적왕래지원에 30억 김무성 위원이 전액 삭감하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지금도 지원하는 보조금은 일체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억 중단했지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금년의 경우에 일시중단 상태입니다.

○고흥길 위원 그런데 현재 일시중단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정해 놓는 것은 예산운용상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상황이 내년에 재개가 된다는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30억을 하는 건데 남북관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상황이 될

지, 앞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더 위축이 될지 축소가 될지 확대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중단되고 있는 사업예산을 내년에 세워 놓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은 김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인도적 지원은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5억을 증액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5억 증액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남북경제교류 이 부분에 대북송전사업하고 개성공단 관련 사업 이것이 있는데 개성공단 관련사업에 상징적으로 삭감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2125억씩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서도 다소 우리가 의지를 표명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삭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국회가, 국회도 솔직한 말로 열린우리당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이러한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전혀 그게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지금 남북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사업을 전면 중단해라 하는 국민적 요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몇 %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하게 되면 찬성률이라든가 반대하는 퍼센트가 수시로 왔다갔다하지요. 그런 경우를 감안할 때 국회도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한테 의지를 보여야 되고 이것은 대미공조라든가 또는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라든가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가 남북교류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상황 내에서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결의라든가 또는 한국 국민들의 뜻을 예산을 통해서 반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이 돼야지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을 조금 더 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기획예산처하고 통일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의된 사항인데 여기서 다시 다 환원시켜 가지고 내년에 증액을 시켜 놓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억제를 하고 중요한 사업, 남북교류기금 출연이라든가 또는 금강산 왕래지원사업이라든가 또 개성공단 관련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사항에서 일부는 삭감이 돼야지 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사업 자체의 운영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법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그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개성공단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고 할 때 그게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2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요, 수입 쪽에 예비자금 회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디서 무슨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통일부혁신재정본부장 박흥렬 22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2814억은 금년도에 기금에서 여유자금으로 남을 것으로 우리가 기예처와 합의해서 예측한 금액이 1560억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2005년도에 그와 같이 예측했던 돈 중에 더 많이 남은 돈이 한 12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800억이 여유자금이 2007년도 수입에 주요한 수입원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2814억이 여유자금……

○통일부혁신재정본부장 박흥렬 금년도에 연말에 예상됐던 여유자금하고 2005년도에 예상 외로 생겼던 결산잉여금이라고 하는 것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2007년도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다음에 지출란에 융자사업비라고 있지요?

○통일부혁신재정본부장 박흥렬 예.

○小委員長 朴鍾根 3741억의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예.

○小委員長 朴鍾根 융자사업 사업 선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통일부에서 추천해야 되죠?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런데 말이 융자사업이지 사실……

위원님, 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융자사업을 보시면……

○小委員長 朴鍾根 말씀하세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거기에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돼 있습니다.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이것은 식량차관입니다.

그다음에 교역·경협자금대출은 교역업체나 대북투자기업이 저희한테 대출 신청을 해 오는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대출해 주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해서 경협분야가 994억이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인도적 지원 사업에 식량 있잖아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아닙니다. 인도적 사업 중에, 식량 그것은 차관 방식이기 때문에 융자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허태수 아니, 예컨대 금년 9월달에 적십자사를 통해 가지고 무상으로 식량을 지원하는 그런……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것은 경상경비로……

○전문위원 허태수 조금 전의 경상경비도 인도적 지원 사업 말씀하신 거죠?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쌀.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인도적 지원사업에도 식량, 사서 주는 것은 이것을 넣고……

○전문위원 허태수 이번에 수해지역 할 때 지출한 비용은……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이번 수해는 무상 지원했기 때문에 융자사업에서 쓴 돈이 아니고 경상사업비에서 썼습니다. 여유자금 중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배기선 위원 경상사업의 인도적 지원 사업에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여기 10페이지 내역서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10페이지 이것은 일반예산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기금의 인도적 지원 사업 내용이 26페이지에 나온 이것 아니에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렇죠?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예.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북한에 식량차관으로, 차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쌀을 구매한 값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인도적 사업 자금으로 쌀을 사다가……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러니까 저희가 차관을 준 것이지요.

○小委員長 朴鍾根 북한에는 차관으로 줬다?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예.

○고흥길 위원 차관을 준 거예요, 현품을 주고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차관이니까 10년 거치 20년 상환 해서, 연리 1%대에 저희가 차관을 준 것이고요.

○고흥길 위원 그러면 현찰이 갔다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아닙니다. 식량으로 간 겁니다.

○고흥길 위원 식량으로 간 거……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차관을, 식량 살 돈을 현찰을 줬다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아닙니다. 쌀을 사서……

○고흥길 위원 쌀을 사 주고 그 상환을 10년 거치 뭐 해서 내도록 이렇게, 실질적으로 받기야 어렵겠지만 하여간 명분은 그렇게 해서, 차관으로 했다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예.

○小委員長 朴鍾根 차관사업이면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융자사업에 들어가야지 왜 인도적 지원 사업에, 경상사업에 분류가 돼 있느냐고?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융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인도적 지원사업이 경상경비사업하고 융자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인도적 사업의 경상경비는 2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26페이지에는 인도적 사업의 융자는 민족공동체회복지원대출에 북한에 대해 식량차관을 제공하는 금액 1925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됐어요. 그러니까 융자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기금에 분명히 있잖아?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

수 예.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이것이 융자사업에 나타나야지 왜 경상경비로 분류돼 있는 인도적 사업에 융자사업이 들어가 있느냐, 내 질의는 그거라니까.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경상경비의 인도적 사업에 융자는 없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인도적 사업의 융자사업이 1925억 원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이름을 똑같이 해야지. 밑에는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 대출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고, 또 융자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융자는 융자고……

이중 계산된 것 아닙니까?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용어는 저희가 혼돈이 안되도록 잘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교역·경협자금대출 822억 이것은 민간에게 대출해 주는 거죠?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리고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994억.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994억 원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철도 개·보수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小委員長 朴鍾根 철도청에다 빌려주는 거예요? 어디다 빌려주는 거예요? 융자 아니에요, 융자?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큰 제목을 쓰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공업 협력에 관해서 현재 남북 간에 800억 원이 합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 시험운행과 연계돼서……

○小委員長 朴鍾根 빌려가는 단체가 어디냐니까?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경공업 그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에 경공업 원자재를 사서 주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쌀 차관과 똑같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북한에다가……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경공업 원자재를 사서 주고……

○小委員長 朴鍾根 차관으로 주고?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것은 차관은 아니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뭐로 주는 거요?

○통일부남북경제협력본부장 김천식 차관 맞습니다. 물자 차관입니다.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예.

○小委員長 朴鍾根 책임자가 도대체 내용도 모르고 국회에 와 가지고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흥길 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무서우셔서 얼어서……

○小委員長 朴鍾根 예비비 자금을 2080억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6자회담이 잘돼야 남북관계 지원이나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예.

○小委員長 朴鍾根 6자회담이 잘 안 되고 또 사단이 나고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면 남북협력사업이 잘 안되겠지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긴장이 완화되면 잘된다고?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6자회담이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무슨 소리요, 도대체?

잘 안될 것 같은데 잘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긴장이 고조되는데도 잘될 거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차관이 답변하세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 의견입니다마는 북한 핵실험 하고 나서 협력기금을 삭감·축소해야 된다는 논리도 많습니다. 또 그러나 반면에 남북관

계의 견인을 위해서 이 예산은 유지돼야 된다는 쪽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겨서 일을 잘해서 그 결과로 보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먼저 돈을 보여 주면서 일을 잘해라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그렇죠. 맞아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그래서 이 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의지를, 이것이 일종의 에너지이고 원동력인데 이 돈을 보여 줌으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小委員長 朴鍾根 차관이 설명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예산 규모가 연내에 집행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집행도 안 되는 예산을 말이지 본예산이, 지금 10조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판에 쓰지도 못할 돈을 통일부에서 이렇게 왕창 갖다 놓고 자금을 대기상태로 두겠다 그 얘기입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여기 못 쓸 돈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특히 경제분야협력 기반조성 사업 하는 이것은 철도 놓고 도로 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은 정부가 정부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최성 위원 박근혜 대표도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철도가……

○小委員長 朴鍾根 그리고 교역·경협자금하고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 이름이 똑같은데 위의 것은 식량이고 밑엣 것은 정부사업이지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예, 거기 위의 것은 인도라고 해서 괄호로 표시돼 있고, 밑에는 경협사업이고 위의 것은 인도적 지원 사업입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인도적 지원 사업 하는 게 식량 아닌가요?

○전문위원 허태수 아니, 경상사업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식량이 아니고 밑에 융자사업에 있는……

○小委員長 朴鍾根 융자사업에 있는 1925억 이것 식량이지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밑에 822억은 원자재 주는 거고?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아닙니다. 822억은 우리 업체들한테 대출해 주는 겁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렇지?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예.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왜 원자재 주는 거라고 그래.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아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경협)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경공업 협력으로 800억 이 포함돼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이게 원료 주는 거예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예.

○통일부남북경제협력본부장 김천식 994억 중에 800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이것이 원료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국내 업체에다가 융자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교역·경협자금대출 이것은 금년 예산이 710억이네?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다 나갔습니까? 지금 실적이 얼마예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지금 70% 정도 나갔고요. 금년 중에 거의 다……

○小委員長 朴鍾根 50억밖에 안 썼네.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런데 업체 선정할 때 통일부가 선정하지요? 통일부가 승인을 하지요, 승인을?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예.

○小委員長 朴鍾根 승인 안 하면 돈 안 나가지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

수 예.

○小委員長 朴鍾根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협자금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첫째로 경협자금은 내가 보기에 내년에 금년보다 더 많이 쓰게 될지, 적게 쓰게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런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무상지원을 특히 경상사업의 경제분야협력기반조성사업 2543억 이것은 사실상 정부가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철도 놓고 도로 놓고 하는 돈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이런 것도 우리가, 남북한에 들어가는 돈을 사실상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小委員長 朴鍾根 이런 것도 차관사업으로 돌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식량도 하여튼, 아무리 인도적 지원 사업의 식량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조건 좋은 방법으로 차관을 줘야 되고.

업체 같은 거 이거는 신용도니 사업 타당성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기본적으로 심사에 대한, 심사는 수출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출 보고서를 저희한테 보고하면, 신용 쪽은 제가 아닙니다마는 우선 지금 희망하는 기업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포함해서 자금대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집행률도 물어보셨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710억 원을 연말까지 소진하는 데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개성공단에 업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고경빈 40개 기업이 분양받고 18개가 공장 가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10개가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지금 68개 기업에 대출된 것이, 05년에는 이거 얼마 집행했어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총 투자기업에 대한 대출이, 현재 한 34건에 1600억 원 정도 대출돼 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1600억 원인데 34건이면 1개 기업체에 도대체 얼마씩 나간 거요?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고경빈 그중에 개성공단은 한 400억 정도 되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예?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고경빈 1600억 원이 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출된 것은 아닙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어디 간 거요?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고경빈 지금 개성 이외의 지역에……

○小委員長 朴鍾根 어쨌든 간에 전부 34개 기업이라며?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600억에서 가장 큰 포션은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사업에서 900억 원을 대출하고 있고요……

○小委員長 朴鍾根 관광공사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예.

○小委員長 朴鍾根 관광공사한테 왜 900억이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관광공사가 금강산사업을 시작하면서 금강산 지역에 있는 현대 자산을 인수하는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900억 원 대출해 갔습니다.

○고흥길 위원 2003년도에 나간 거죠?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옛날 얘기입니다.

○고흥길 위원 조홍규 사장 계실 때 나간 거예요.

○小委員長 朴鍾根 또 인도적 예산도 다 안 쓰고 남을 것 아니에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내년 예산도 다 안 쓰고 남을 거고, 예비비 자금이 금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쓰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예비비 자금만 확보해 놓고 돈을 사장을 시키고 있느냐고요? 필요한 돈만 갖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쓰다가 모자란다, 모자란다 해야 될 판인데……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1조 1850억 중에 여러 가지 이월된 돈 등을 다 쓰고 그중에 1600억 원이 공자기금 예수금으로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1600억 원을 우리가 차입을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1600억 원은 여기

에서 현금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수를 않게 됩니다, 저희 자금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2080억 중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小委員長 朴鍾根 예비자금 회수,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요? 1600억이 어디 있어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거기 22페이지에……

○小委員長 朴鍾根 공자기금 예수금, 이거예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16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80억 중에 극단적으로 1600억 원은 사실 허수의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이거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예산을 공자기금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공자기금에서는 이리로 돈이 나가는 것으로 또 계정이 잡힐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정시키려면.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런데 저희는 일단……

○小委員長 朴鍾根 왜 이렇게 허수를 집어넣어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한도를 정해 놓고…… 왜냐하면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할 적에 적어도 내년의 남북관계를 예측을 해서……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예산이 과다 책정돼 있어, 기금운용계획이. 수입도 1600억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수입을 턱 잡아 놓고. 예비비도 2000억이나 턱 잡아 놓고. 금년도 예산이 1560억인데 근 50억이 올라갔단 말이지. 예비비 규모가 30%나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비비를 왜 30%씩이나 늘리며, 금년도에 돈이 남았다며? 1200억. 금년에 1200억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았다며?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1200억 원은, 2005년도의 결산잉여금 12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1560억 원은 몇 년도 거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것은 금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금년도에……

○小委員長 朴鍾根 금년도에 1560억이 남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금년도 예비비 1560억을 한 푼도 안 쓰고 내년도로 넘어가는구먼.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렇게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왜 쓰지도 않은 돈을 1500억씩 이렇게 잡고 앉아 있느냐 이겁니다. 내년도에도 공자금하고 또 예비비 2000억하고 여기 공자금 1600억하고 이렇게 가라 숫자를 왜 넣어 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런데 1600억은 수입 측면의 숫자이고요. 또 여유자금은 이미 지출돼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1 대 1로 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통일부차관 신언상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예.

○통일부차관 신언상 위원장님은 예산의 대가시니까……

(웃음)

○小委員長 朴鍾根 대가는 무슨 대가?

○통일부차관 신언상 배워 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분기별 계획서에 의해서 1년치 예산 틀이 딱 짜지지 않습니까? 1년치 집행계획이? 그러나 기금이라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소.

○통일부차관 신언상 더구나 남북기금이 한 70개 되는데……

○小委員長 朴鍾根 속 탄다, 속타!

기금예산 편성 안 하고 쓰는 기금이 어디 있소?

○통일부차관 신언상 지금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小委員長 朴鍾根 편성해 놨으면 편성한 대로 쓸 작정을 하고 있어야지. 그걸 우예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소?

○통일부차관 신언상 저도 말씀 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럼 해 보쇼.

○통일부차관 신언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금이 한 70개 되는데 특히 남북기금만큼은, 남북관계는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모르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잘 나가다가 지금 하반기에 이래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도 6·17 면담 이후 하반기에 80%가 집행이 됐습니

다.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지금 6자회담 같은 것이 전혀 전망이 없다면 모를까? 어느 정도 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합의가 된 상태이고, 내년에도 그냥 이대로 바닥으로 갈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달라질지……

○小委員長 朴鍾根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죠?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小委員長 朴鍾根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가 이제 하나 나왔다.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장내 웃음)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예비비를 여기 기금 예비비로 다 두지 말고 본예산 예비비에 넣어 놨다가 6자회담 잘 되고 그러거든 이거 타 가란 말이오. 이거 본예산 예비비에다 넣어 놓으세요. 쓰지도 않을 돈을 왜 기금 예비비로 넣어 놔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기금은 건건이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고흥길 위원 이거 위원장님도 발언시간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29페이지, 지출총괄표 보시면 금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1176억 원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남북협력 계정 그 바로 밑의 사업비에 보시게 되면 남북협력 계정 자체의 규모는 434억밖에 안 들었는데 사업비는 1176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조금 불투명한 부분은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을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예비자금에 넣었기 때문에……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융자사업에서 돈이 못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경제분야 협력기반조성 사업에도 돈을 못 쓸 가능성이 많고, 예비비가 과다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 예비비를 본예산 예비비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잘 되거든 빼다 쓰라 이 말이야.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것은 기예처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금은 별도로 계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 속에 예비비로 넣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에서 2000억만 까자 이거야. 쓰지도 않는 돈을, 6500억 출연금을 4500억으로 해서 2000억만 깝시다.

○통일부차관 신언상 처음에는 금강산만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매년 돈이 남잖아요. 매년 돈이 남아 가지고 금년에는 1560억 남고 작년에 1200억 남고 매년 남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매년 남았고……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차이가 일반예산에 예비자금으로 2000억을 떼어놓고 만일에 못 쓰게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국고에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추경이나 이런 데서 출연을 그때 늘리면 돼.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정말로 그쪽으로 돌아갈 돈의 성질이 아닙니다. 여기는 남으면 결국은 2008년도에 이월되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남북관계가 그때 가면 많이 발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여당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최성 위원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때 진영 간사님께서, 남북협력기금 내역을 다 비공개로 볼 때 그때 한나라당 위원님이 많이 안 계시고 해서 간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제기했던 부분이 대북 송전 기금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셨고, 물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이나 또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협력기금 자체가 대단히 미묘한 사안이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더 증액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북한 핵 폐기를 유인해 내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또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폭적인 감액을 해야 된다는 시각도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개회의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협력기금 자체는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마무리 짓기보다는 오늘 전체적인 모든 논의에서 거의 합의가 도출되었는데 앞에 일반기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협력기금만큼은 여당 위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 대체적으로 안정적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액을 유지하고 그 외에 몇 가지 부분에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하고 또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금강산관광 문제나 또

그 외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 또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비비가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거나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전체회의로 회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 위원 예,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지루하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최성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오늘 날 새면서 토론이 되어야 되고 표결로 가면 위원장님 좀 불리한 상황이고.

○小委員長 朴鍾根 표결 안 하고 내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새로 합시다.

○고흥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무책임한 일이 되니까 우리가 증액한 부분 또 삭감해야 될 부분, 그냥 놔둘 부분 대충 윤곽이 다 드러나고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합의된 대로 정리하시고 다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지원경비 30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6500억 중에서 2000억이라고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해야지요. 2000억 정도를 깎아야지 된다 하는데 사실은 여유자금이 2800억씩이나 나오고 매년 1200억 1500억 이래 가지고 계속 이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2000억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국내외,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의견이니까 그런 점에서 2000억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것이고요.

위원장님, 예비비로 일반회계 돌리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회계기법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줄면 예산에 여유가 생깁니다. 예산에 여유가 생기는데 예산에 여유가 생기는 부분을……

○고흥길 위원 그것을 그냥 예비비로다가 넣자……

○小委員長 朴鍾根 예비비를 증액해서 넣어놨다가 나중에 빼 쓰든지 안 그러면 추경에 출연으로 돌리는……

○전문위원 허태수 통일부 예산 주문에 예비금 주문이 있습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통일부가 아니고.

○전문위원 허태수 정부 전체에?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고흥길 위원 통일부 예산에서 감액하는 것이지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니까 우리가 감액하는 것이지.

○통일부혁신재정기획본부장 박흥렬 위원장님 그것은 정말 저희로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정부에서는 물론 반대할 것이고 여당 위원들도 반대한다 이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남북협력기금이……

○배기선 위원 여당 위원은 증액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小委員長 朴鍾根 남북협력기금이 과다 책정되었고 특히 예비비규모가 과다하기 때문에 예비비 규모에 있어서 1000억 내지 2000억 수준의 삭감 의견이 한나라당에서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지 뭐.

○이화영 위원 예, 좋습니다.

○고흥길 위원 나머지는 정리를 다합시다. 그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는……

○전문위원 허태수 조금 전에 1000억 내지 2000억 감액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小委員長 朴鍾根 2000억.

○최성 위원 협력기금은 어차피 전체 통체를 놓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

○小委員長 朴鍾根 과다한 2000억이라는 예비비……

○전문위원 허태수 예비자금운용……

○고흥길 위원 여유자금이지.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여기 예비비로 2080억이 들어있잖아.

○전문위원 허태수 예.

○小委員長 朴鍾根 예비비 2080억은 과다책정된 것으로 삭감을 주장했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고흥길 위원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에서 2000억,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2000억?

(「아니지요」 하는 위원 있음)

○小委員長 朴鍾根 출연금의 2000억 삭감을 주장했다, 과다책정되어서 그렇게 주장했다 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장하신 대로 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족화해센터 50억.

○통일부차관 신언상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최성 위원 합의사항하고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협력기금이 아닌 말씀하신 50억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해서 올리는 것이고, 정리를 하시지요.

○小委員長 朴鍾根 50억 증액.

○전문위원 허태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통일정책추진 지원금 중 민화협 지원예산을 1억 원 증액하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민화협 예산이야 9700하지 말고……

○전문위원 허태수 예, 그다음에 민족화해센터 건립에 50억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지원 예산에 20억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천구백 몇십억인데 그냥 20억 증액시킨 거예요.

○小委員長 朴鍾根 가만 있어 봐요. 예산이 452억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그렇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452억에서 20억을 증액한다 이거예요?

○고흥길 위원 그렇지요.

○小委員長 朴鍾根 그 이야기예요?

○고흥길 위원 작년 수준으로 올린다 이것이지요.

○배기선 위원 작년보다 엄청 늘어난……

○小委員長 朴鍾根 아니, 그러니까 20억 아니에요. 20억 올린다 이것이지요?

○전문위원 허태수 예, 맞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리고 또 5번.

○전문위원 허태수 5번 하나원 본원증축 예산은 현상유지……

○고흥길 위원 설계비만 하지요. 내년에 이것은 건축비 넣을 필요가 없어요.

○小委員長 朴鍾根 이것은 그냥 놔 둬.

○전문위원 허태수 설계비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개성공단물산전 개최에 대해서……

○고흥길 위원 그것은 다 그대로……

○전문위원 허태수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小委員長 朴鍾根 말 안 한 것은 자꾸 말하지 마라.

통일미래지도자 과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까고.

○전문위원 허태수 원래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원래대로 해 놨어요?

○고흥길 위원 정책개발까지 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에서……

○小委員長 朴鍾根 10번 통일교육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전문위원 허태수 통일교육원예산에 들어가 있는, 통일교육협의회 기능……

○통일부차관 신언상 통일교육지원비 15억입니다. 이 중에 통일교육원예산하고……

○小委員長 朴鍾根 알았어요.

○배기선 위원 되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리고 마지막에 기금 예비비가 과다하여 출연금 2000억……

○고흥길 위원 아니, 인적왕래지원 30억 삭감.

○최성 위원 그 부분은 제 생각에 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으로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협력기금 내부항목으로 같이 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다시 또 반복되니까요. 고 위원님이 그것에 대한 삭감을 주장했고……

○전문위원 허태수 삭감의견이 들어있으니까……

○최성 위원 의견으로 해서 그때 가서 마지막……

○고흥길 위원 그것을 이렇게 해야 돼요. 시간을……

○小委員長 朴鍾根 부대의견에다가 소수의견으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 허태수 2000억 삭감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小委員長 朴鍾根 2000억하고 또 뭐 30억?

○최성 위원 관광사업지원에 대한 삭감 주장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전문위원 허태수 금강산관광지원 예산 30억 삭감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다 되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정리된 내용 중에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의견 없으십니까?

○통일부차관 신언상 예.

○小委員長 朴鍾根 새 항목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문위원 허태수 새 항목 설치할 것이 있었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있어요? 새 항목 설치 또는 증액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 통일부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전문위원 허태수 민족화해센터 건립은 새 항목 설치입니다.

○이화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었어요.

○전문위원 허태수 동의하셨습니다.

○小委員長 朴鍾根 그러면 통일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의해서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고홍길 김무성 박종근 배기선
이화영 정몽준 최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문위원 허태수

○정부측 참석자

통일부
차관 신언상
혁신재정기획본부
본부장 박홍렬
남북협력기금팀장 한기수
남북경제협력본부장 김천식
사회문화교류본부장 조용남
통일교육원장 김홍재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고경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이충원
외교통상부
제2차관 이규형
기획관리실
실장 김수동
기획심의관 조윤수
재정기획관실서기관 김홍기
외교정책실국제기구국장 강경화
북미국장 조태용
재외동포영사국
국장 김봉현
여권관리관 이병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오세정
제1정책기획관 김영구
제2정책기획관 김두권

○기타 참석자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권인혁
기획이사 김승의
사업이사 김혜원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신장범
총무기획이사 이현주
개발사업이사 이해균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구홍
기획이사 김경근
사업이사 김승웅